



Center for Economic Security and Foreign Affairs

경제안보 Review

경제안보 분석

중동전쟁 이후 중국의 에너지안보 전략과 한국에의 함의

경제안보 분석

미국·유럽 전략 기술 투자심사의 공통 과제와 시사점

경제안보 현안

글로벌 권역별 에너지 (원유·천연가스) 의존 및 수급 현황

EWS 공급망 / 에너지 동향

- 미국·EU, 핵심광물 전략적 파트너십 MOU 체결 및 핵심광물 행동계획 발표
- UAE, OPEC·OPEC+ 전격 탈퇴 결정 - 독자적 증산 노선 선언
- 미국, EU산 자동차 관세 15%→25% 인상 발표, 툰베리 협정 이행 갈등
- 트럼프 행정부, AI 모델 사전 검토 체계 고려 중 - 비개입 기조 수정 가능성 부상



온라인 다운로드 ·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게시판

https://www.mofa.go.kr/www/brd/m_26799/list.do

경제안보 Review · 메일링 서비스 신청

cesfa@mofa.go.kr

I. 경제안보 분석

임산호 선임전문관

중동전쟁 이후 중국의 에너지안보 전략과 한국에의 함의

01

1. 중동전쟁 영향과 관련한 중국 내·외부 평가
2. 중국의 에너지 수급 동향과 에너지안보 추진 전략
3. 에너지 패권을 둘러싼 미-중 경쟁 심화 전망
4. 한국에 미치는 함의

<부록> 중국 에너지 다변화 동향

II. 경제안보 분석

이재원 선임전문관

미국·유럽 전략 기술 투자심사의 공통 과제와 시사점

19

1. 전략 기술 관련 투자심사 제도의 확산
2. 미국과 유럽 투자심사의 공통 과제
3. 전망과 시사점

III. 경제안보 현안

유아름 전문관

글로벌 권역별 에너지 (원유·천연가스) 의존 및 수급 현황

30

1. 개요
2. 권역별 에너지 수급 구조 현황
3. 권역별 에너지 구조 핵심 이슈
4. 평가 및 시사점

IV. EWS 공급망 / 에너지 동향

- 미국·EU, 핵심광물 전략적 파트너십 MOU 체결 및 핵심광물 행동계획 발표
- UAE, OPEC·OPEC+ 전격 탈퇴 결정 — 독자적 증산 노선 선언
- 미국, EU산 자동차 관세 15%→25% 인상 발표, 턴베리 협정 이행 갈등
- 트럼프 행정부, AI 모델 사전 검토 체계 고려 중 - 비개입 기조 수정 가능성 부상

중동전쟁 이후 중국의 에너지안보 전략과 한국에의 함의

임산호 선임전문관

요약

■ 중동전쟁 발발 이후 중국은 에너지안보를 경제안보·국가안보 전반의 핵심 의제로 확대하며, 단기 충격 흡수와 장기 자강 전략을 동시에 추진

- ▶ 중국은 제15차 5개년 계획에서 처음으로 '에너지 강국' 건설을 국가 목표로 제시하며, ▲석유·가스 증산·비축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 ▲핵심광물 공급망 지배력 강화 ▲위안화 국제화를 패키지로 추진 중
- ▶ 최근 중동 위기를 계기로 중국은 에너지안보를 단순 공급 안정 차원을 넘어 주변국 및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전략적 외교 수단으로 활용하는 움직임을 강화 중

■ 미국-중국 전략경쟁은 에너지 패권 경쟁은 물론 해상 운송로·항만·조선·핵심광물·재생에너지 공급망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

- ▶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미국이 화석연료 회귀와 중국과의 재생에너지 공급망 분리를 강화하는 동안, 중국은 핵심광물·재생에너지 공급망 자체를 새로운 지정학·경제안보 영향력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흐름이 강화
- ▶ 특히 글로벌 사우스를 중심으로 가격경쟁력과 인프라 패키지를 앞세운 중국의 에너지 영향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 미국 주도의 '안보형 공급망'과 중국 주도의 '가격·개발형 공급망' 간 이원화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

■ 한국에는 도전과 기회가 병존할 것으로 판단되며, ▲에너지공급 다각화 ▲재생에너지 공급망의 대중 의존도 관리 ▲해상 물류·운송로 대응 ▲경제안보 제도 정비를 포괄하는 통합적 에너지 경제안보 전략 수립이 필요로 될 전망

- ▶ 재생에너지 공급망과 핵심광물 가공이 중국 중심으로 집중된 상황에서, 에너지 전환 가속 움직임이 역으로 중국에 대한 기술·공급망 의존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응 필요
- ▶ 중국의 에너지안보 강화 전략은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을 위축시키는 동시에, 중국의 잉여 생산 능력이 제3국 시장으로 수출되면서 해외 시장 경쟁까지 심화시키는 이중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
- ▶ 미·중 에너지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국이 배터리·원전·전력기기·조선·수소·SMR·에너지 인프라 등 분야에서 비중국 대안 공급자로서 역할을 확대할 가능성

1. 중동전쟁 영향과 관련한 중국 내·외부 평가

■ 중국은 중동전쟁 충격 여파를 ▲에너지 구조 우위 ▲전략적 비축 ▲공급망 관리를 통해 흡수하고 있으며, 향후 에너지 전환 가속화 시 수혜자로 꼽히고 있음

▶ 중동전쟁 발발 이후 중국은 정제유 수출 통제와 국내 유가 인상 제한 조치를 병행하는 한편, 러시아산 원유 수입 확대 및 이란과의 해협 통항 협상 등 외교적 접근을 통해 중동발 에너지 공급 불안과 국내 시장 충격에 대응 중

- (수출통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는 2026년 3월 정제유 수출통제 조치(휘발유, 경유, 항공유)를 발동해 국내외 시장 균형을 추진

- (가격인상 제한) 국제 유가 상승에도 중국 정부는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휘발유·경유 가격 인상 폭을 실제 필요 수준보다 낮게 제한하는 가격 통제 조치(3.24)

* 중국 휘발유·경유 최고 소매가격을 톤당 2,205위안, 2,120위안으로 인상해야 하는 상황에서 실제 인상폭은 그 절반 수준인 1,160위안, 1,115위안으로 제한

- (러시아산 원유 수입) 중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은 3월 기준 전월 대비 약 32% 확대되었으며, 할인된 ESPO(동시베리아-태평양) 원유를 중심으로 민간 정유사들의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CREA)

- (다각화된 석유화학 산업 통한 충격 완충) 중국의 석유화학 부문은 나프타 외에도 에탄·LPG·석탄화학(CTO/MTO) 등 원료 다변화 구조를 구축하고 있어, 고유가 국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원가 충격을 일부 완충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

* 중국의 석유화학 원료 구조는 나프타(약 40%)·에탄(약 15%)·석탄화학(약 20%)·PDH 프로판(약 20%)으로 구성. 나프타 의존도가 높은 한국·일본과 비교할 때, 원료 가격 변동에 대한 상대적 내성이 크다는 분석

- (외교적 접근) 중국은 이란과의 외교 접촉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를 논의해왔으며, 3월 이후 이란은 우호국·사전 조율한 선박의 제한적 통항을 허용하면서 중국·말레이시아 등 국가 선박의 통과 협의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짐

▶ 중국 관영매체 중심으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수입비용 증가, 공급망 불안이 중국 경제에 단기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대체 능력 향상과 비축 체계 강화를 통해 장기 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 견지 중

- 발개위 당조서기·주임 정산제(郑栅洁)는 인민일보 기고문*(4.20.)에서 2025년 말 기준 육상 원유 재고 12억 배럴 이상으로 중동 수입 80% 감소 시에도 약 260일 공급 유지가 가능하다고 밝히며, 중동 의존도 축소, 파이프라인 가스 비중 확대 등을 근거로, ▲석유·가스 증산 및 비축 확대 ▲대국 비축 체계의 조속한 구축 ▲중·러 에너지 협력의 지속 확대 등을 추진함으로써 장기 관리가 가능하다고 발표

* 持续提升国家经济安全保障能力 (지속적인 국가 경제안보 보장 능력 제고)

- ▶ 중동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청정에너지 전환 수요 확대가 태양광·풍력·배터리·희토류 가공 등 재생에너지 핵심 기술 및 공급망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됨
 - 중동전쟁 이후 에너지 수입국 중심으로 화석연료 공급망의 구조적 취약성을 절감하면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에너지안보 과제로 인식하는 추세가 뚜렷해짐
 - 그러나 재생에너지 공급망이 압도적으로 중국에 집중되어 있어 에너지 자립을 위한 전환 가속이 역으로 중국에 대한 기술·공급망 의존을 심화시키는 구조가 형성 중
- ▶ 때문에 중국 내부에서는 중동전쟁이 중국 산업과 공급망 회복력을 부각시키고 중국 경제와 위안화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존재
 -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인도·일본·한국 등의 제조업은 고유가로 인한 생산비용 증가와 수출경쟁력 저하가 예상되는데, 중국은 구조적 완충 역량을 바탕으로 아시아 경쟁국의 생산 능력 수축을 중국산 철강·화학제품 등의 시장 점유율 확대 기회로 추진할 것으로 분석 (웨이카이증권 (粤开证券) 심층보고서, 3.8.)
 - 나아가 향후 재생에너지 및 관련 발전설비 수출 기회 확대가 경제 전반의 압력을 부분 상쇄하면서 중국 경제의 상대적인 회복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 * 중국 배터리기업 CATL은 2026.4월 홍콩 증시에서 약 392억 홍콩달러 규모 유상증자를 추진했으며, 자금은 ESS·무탄소 해운·폐배터리 재활용 등 청정에너지 사업 확대에 활용될 예정. 이번 유상증자 성공은 홍콩을 글로벌 자금의 중국 청정에너지 산업 우회 조달 창구로 부상시키는 동시에, 중국 청정에너지 산업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제기

■ 중동전쟁 이후 중국이 에너지안보를 경제안보·국가안보 거버넌스 전반의 핵심 의제로 확대해 추진하는 모습이 관찰되며, 이에 따라 미·중 전략경쟁과 우리 경제안보상 미치는 함의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

- ▶ 중국은 이번 위기를 통해 외부 에너지 의존이 실질적 국가안보 리스크임을 재확인함에 따라, 에너지안보와 에너지 자강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강화 중
 - 리창 총리는 국무원 에너지발전 집체학습(4.20.)에서 "국제정세의 심층적 변화와 에너지 소비의 지속적 증가를 감안할 때, 에너지시스템의 복원력과 에너지 안보를 안정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화석에너지의 청정·고효율 이용을 높여야 한다고 지시
 - 발개위 당조서기·주임 정산제(郑栅洁)도 동일 발표한 인민일보 기고문을 통해 제15차 5개년 계획에서 경제안보 보장 능력을 전면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식량·에너지·자원 보장과 유가스 증산, ▲석탄·전력의 안정적 공급, ▲중러 에너지 협력 확대 등 에너지안보를 강조
- ▶ 이에 본문에서는 중국의 에너지 수급 동향과 전략을 검토하고, 에너지안보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중국의 현재 포지션과 향후 전략이 미·중 패권 경쟁과 우리 경제안보에 미치는 함의를 분석

2. 중국의 에너지 수급 동향과 에너지안보 추진 전략

※ <부록> '중국 에너지 다변화 동향' 참조

■ 중국은 90년대부터 외교를 통한 에너지수급 다변화 전략을 추진해왔으며, 중동전쟁 이후 에너지 자립에 대한 추진은 더욱 뚜렷해질 전망

- ▶ 중국은 경제가 급속히 성장한 1990년대 에너지 원유 순수입국으로 전환되면서 에너지다변화 필요성을 자각하고, 2000년 초부터 ▲육상 파이프라인 비중 확대 등 에너지수송로 다각화 ▲일대일로를 통한 에너지 외교(2013년~) ▲新에너지안보전략(2014년~) 등 다변화 전략을 적극 추진

- 중국은 말라카 해협 의존도 탈피를 위해 2000년대에 육상 파이프라인 다각화에 투자해 전체 가스공급의 약 49%까지 비중을 끌어올리면서 해상 LNG 의존도 감축

※ 4대 전략통도: ▲(동북통도) 중국-러시아 원유 파이프라인(2011년 개통), 중국-러시아 가스관(Power of Siberia, 2019년 개통) ▲(서북통도) 중앙아시아(투르크~카자흐~우즈벡~신장) 가스 파이프라인(2009년 개통) ▲(서남통도) 중국-미얀마 유가스 파이프라인 ▲(해상통도) 말라카 해협 경유 중동-아프리카산 원유 해상 수송로

-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 제창(2013년) 이후 에너지 인프라 투자가 구상의 핵심 축으로 일대일로 전체 투자의 40% 이상이 에너지 프로젝트 투자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며(ORF 등), 중국은 현재 90개국 이상과 에너지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

※ 2022년 기준 중국의 일대일로 국가로부터의 석유 수입은 약 3.98억 톤으로 전체 수입의 78.3%, 천연가스는 1,117억m³으로 전체 수입의 73%를 차지(ORF)

- 2014년 중국이 발표한 '新에너지안보전략'에서 핵심축 중 하나로 국제 에너지 협력 심화가 명시된 이후, 중국은 아세안, 아프리카, 중동, 중앙아시아 등 각각 지역별 에너지 협력 메커니즘을 확대하며 글로벌 에너지 거버넌스와 규범 형성에 적극 참여 중*

* 제1회 중국-아랍국가 정상회의(2022.12), 제1회 중국-중앙아시아 정상회의(2023.5) 계기로 각각 에너지 협력 메커니즘 공식화

- ▶ 현재 중국은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으로 원유 소비량의 약 70%를 수입에 의존하나, 석탄 중심의 에너지 구조 덕분에 전체 에너지 자급률은 약 80%로 매우 높음

※ 석탄이 전체 에너지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세계 1위 생산), 거대 내수 에너지원의 뒷받침이 있어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음에도 전체 자급률 유지가 가능한 구조

※ 반면, 석유화학-항공-운송용 액체연료 수요가 크고 국내 유전 생산에 한계가 있어, 원유 수입 의존도는 구조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음

- 중국은 ▲국가 전략비축유 ▲기업 의무비축 ▲상업비축의 3단계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2025년 말 기준 총 비축규모는 약 12~14.7억 배럴로 순수입 수요 기준 110~180일분에 해당하여 IEA 권고 기준(90일)을 크게 상회

※ 중국 정부는 비축유 규모를 공식 비공개하며, 위 수치는 IEA·Kpler·Kayrros 등 제3자 추정치. 구성별로는 정부 전략비축유 약 4.5억 배럴+상업 재고 약 8.5억 배럴로 추산(EIA, 2026.3)

※ 실제 위기 상황에서 호르무즈 통항량이 90% 이상 급감했음에도, 중국 국내 유가 변동성은 국제 시장의 1/5 수준에 그치며 시장 패닉을 방지

- ▶ 러-우 전쟁, 중동전쟁 이후 러시아는 중국의 핵심 대안 에너지 공급원으로 부상했으며,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2026년 1~2월 중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약 40.9% 증가하는 등 중동전쟁 이전부터 확대 추세
 - 다만 동시베리아-태평양(ESPO) 파이프라인 및 카자흐스탄 경유 노선은 이미 높은 가동률을 유지 중이며, 러시아의 유조선 부족과 서방 제재에 따른 물류 제약도 지속되는 상황에서 러시아 경유 공급망은 단기적으로 공급 확대에 제약 존재
 - 또한 미국이 3월 인도에 대해 러시아산 원유 수입 관련 일부 제재 완화 조치를 검토하면서 중국과 인도 간 러시아산 원유 확보 경쟁도 심화되는 양상
 - 이에 중국은 ‘파워 오브 시베리아 2(Power of Siberia 2)’ 가스관 협상 가속화를 통해 대러 에너지 협력을 보다 제도화·장기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
- ▶ 최근 AI 데이터센터 확충·전기차 보급 가속화·제조업 전동화 등 복합적 수요 요인이 맞물리면서 중국 내부의 전력 수요가 구조적 급증 국면에 진입하고 있으며, 이는 수입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안정적 전력 공급 기반의 필요성을 더욱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 중
 - 2023년 중국의 전력 생산량은 약 9,500TWh(세계 전력 수요의 3분의 1 이상)로 세계 최대 규모이며, 미국(약 4,400TWh)의 두 배 이상 / 2024년 말 기준 전력 수요는 1만 TWh에 근접하며, 2025년에는 약 10조 kWh(1만 TWh) 수준에 달할 전망(IEA)
 - 특히 AI 데이터센터 수요 급증, 태양광 모듈·전기차·배터리 등 첨단 제조업 생산 확대, 5G 네트워크 확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중
- ▶ 한편, 중동전쟁 이후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중국이 대미 보복관세 과정에서 사실상 축소했던 미국산 원유·LNG 수입을 전략적으로 검토할 가능성도 제기
 -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미·중 협상 카드로 유지할지, 혹은 공급 안정 차원에서 실용적으로 접근할지가 주요 전략 변수로 부상
 -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항공기와 함께 미국산 원유·LNG 구매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5월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

■ 중국은 제15차 5개년 계획을 통해 에너지안보 강화를 추진 중이며, 핵심광물 통제를 강화하고 청정에너지 공급망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지속

- ▶ 제15차 5개년 계획에서 중국은 처음으로 ‘에너지 강국(能源强国)’ 건설을 국가 목표로 제시하며, 에너지안보 강화·저탄소 전환·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추진 중
 - 중국은 높은 석유·가스 대외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천연가스를 포함한 핵심 에너지의 자급률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매장량 확대와 국내 생산 증대에 집중하는 모습
 - ※ 특히 2019~2025년 「석유·가스 매장량 및 생산 증대를 위한 7개년 행동계획」을 추진하며 원유 생산량을 2018년 1억9천만 톤에서 2024년 2억1,300만 톤 수준까지 확대했으며, 2025년에는 역대 최고 수준인 약 2억1,600만 톤을 기록
 - 중국은 향후에도 연간 약 2억 톤 수준의 원유 생산을 유지하는 한편, 2030년 전후를 목표로 국내 석유·석탄 소비 정점을 관리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화석연료 사용 감축을 병행 추진할 계획

▶ 중국은 이미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희토류·리튬·흑연·갈륨·폴리실리콘 등의 채굴·정제·가공 부문을 상당 부분 장악한 상태이며, 단순 원료 공급을 넘어 정제·가공 기술 자체를 전략 자산화하는 흐름도 강화 중

-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채굴의 약 60%를 차지하는 반면, 정제·분리·영구자석 생산 등 후공정에서는 약 90% 내외의 점유율을 보유
- 배터리용 흑연 음극재, 태양광 공급망인 폴리실리콘·태양광 웨이퍼 분야에서도 중국산 대체재를 찾기 어려울 만큼 압도적 생산 능력을 유지 중
-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2023년 12월 「중국 수출금지·수출제한 기술목록」 개정을 통해 희토류 추출·분리·영구자석 제조 기술을 수출금지 및 제한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배터리 양극재 제조·리튬 가공·태양광 웨이퍼 제조 관련 일부 공정기술에 대한 통제도 단계적으로 강화 중

■ 중국은 녹색전환 경쟁력을 자국 에너지안보 강화의 핵심 해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우호적·중립적 국가들과의 경제·에너지 협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비용우위를 바탕으로 글로벌 청정에너지 시장 지배력을 강화 중

▶ 중국은 일대일로(BRI)를 통해 4대 전략 통도를 구축해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에너지안보 강화 기반을 조성해왔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에너지 인프라 중심의 대외전략을 지속 추진할 전망

- 일대일로의 에너지 인프라 투자는 ▲수입선 다변화 ▲연선국 자원과 중국 자금·기술의 결합 ▲국내 과잉설비·자본의 해외 진출 ▲인프라 잠금효과(lock-in effect)를 통한 영향력 확대 ▲글로벌 에너지 거버넌스 참여 등 복합적 전략 목적이 결합된 결과로 평가
- 특히 파이프라인·항만·철도 등은 해당국 에너지 물류를 중국과 장기적으로 연결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기능하는 모습
- 시진핑 주석은 3월 투르크메니스탄 지도자와의 회담에서 천연가스 협력 확대를 강조했으며, 러시아와도 ‘시베리아의 힘 2(Power of Siberia 2)’ 등 대형 에너지 프로젝트 협의를 지속 추진 중
- ※ 상반기 중 예정된 푸틴 대통령 중국 방문에서도 에너지 협력이 핵심 의제가 될 가능성

▶ 한편, 중국 재생에너지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로 인해 비용 경쟁력을 상실한 서방 기업들의 구조조정 가속화

- 태양광 분야에서는 Longi, JinkoSolar, Trina, JA Solar 등이 중국 내 과잉생산과 가격경쟁력을 기반으로 초저가 수출 전략을 확대하면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 중
- 2024~2025년 태양광 모듈 가격 급락 이후 미국·유럽·동남아 일부 기업들은 구조조정과 파산 압박에 직면했으며, 독일 Meyer Burger의 생산 축소, 미국 SunPower의 파산보호 신청 등 서방 태양광 산업 경쟁력 약화가 본격화
- 풍력 부문에서도 Goldwind, Envision, Mingyang 등이 초대형 해상풍력 터빈과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중남미·중동·동남아 시장 진출을 확대 중이며, Siemens, Gamesa, Vestas 등 유럽 기업들은 수익성 악화와 공급망 부담으로 어려움 겪는 중

▶ 중동전쟁 발발 이후 중국은 에너지안보를 단순한 공급 안정 차원을 넘어 주변국 및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전략적 외교 수단으로 활용하는 동향 관찰

- 중국은 지역 에너지안보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에너지 부문에서 소프트파워 전략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역내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중국의 에너지 수출에 우호적인 협력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

※ 중국의 에너지·자원 공급 관련 영향력 확대 중 : ▲(베트남) 항공유 부족 우려와 관련해 중국에 에너지 안보 협력을 요청(3.15) ▲(필리핀) 필리핀은 중국으로부터 비료 수출 제한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보도(3.25)했으며, 마르코스 대통령도 중국과 연료·비료 조달을 협의 중이라고 밝힘 ▲(호주) 중국과 항공유 공급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호주 외무장관 방중 이후 언급, 4.30) ▲(캄보디아·라오스·태국·미얀마 등) 중국 외교장관의 순방 이후 이들 국가와 에너지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전력 인프라 협력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짐

- 중동전쟁은 중국에 전기차, 태양광 패널 및 기타 친환경 기술의 과잉 공급을 해소할 수 있는 판로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

■ **중국은 에너지·핵심광물 거래에서 위안화 결제를 확대함으로써 에너지안보 강화와 달러 중심 국제금융 질서 약화라는 두 가지 전략 목표를 동시에 추진 중**

▶ 중국은 석유·가스·핵심광물 거래에서 위안화 결제 비중 확대를 적극 추진 중이며, 단순 통화정책을 넘어 이를 에너지안보·금융안보·경제안보가 결합된 국가 전략으로 평가

※ 다만 글로벌 전체 에너지 거래에서 위안화 결제 비중은 여전히 10% 미만으로 추정되며, 특정 양자 관계(중국-러시아, 중국-사우디)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단계

- 제15차 5개년 계획 건의에서도 '위안화 국제화 촉진 및 주체적·통제 가능한 위안화 국경 간 결제체계 구축'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었으며, CIPS(위안화 국제결제시스템)와 원유·가스·광물 등 원자재 거래에서 위안화 결제 구조 구축을 추진 중

* CIPS 참여 기관은 총 1,683개로, 중동에서도 사우디 주요 국유은행들이 CIPS에 공식 접속하며 SWIFT 의존도를 축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상황

- 중국과 사우디 간 디지털 위안화 기반 원유 결제 실험(2023년 10월)이 진행되었으며, 사우디는 2024년 6월 CBDC 기반 국경 간 결제 플랫폼인 mBridge에 정식 참여자로 합류. 중국은 GCC·러시아·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에너지 거래에서 위안화 결제 확대를 지속 추진 중

- 특히 러시아에 대해서는 서방 제재 이후 탈달러화가 급속히 진행되며, 러시아 재무부는 2025년 중러 교역의 99% 이상이 루블·위안화로 결제되고 있다고 발표

- 브라질, 호주의 철광석 수출*, 카타르·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과의 가스 거래 등에서도 중국측 요구로 일부 위안화 결제가 도입되고 있으며, 중국은 에너지 공급망과 금융결제망을 결합하는 전략을 강화하는 모습

* 중국, 호주 BHP社와 철광석 구매 계약에서 위안화 결제 비중 확대 합의(2026.4월)

▶ 중국은 핵심광물 시장에서도 가격 결정권 강화와 위안화 국제화를 동시에 추진 중

- 현재 리튬·코발트·희토류·흑연 등 주요 핵심광물의 글로벌 가격 기준은 상당 부분 중국 거래소(SMM·SHFE·GFEX 등)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거래 가격 역시 위안화 기준으로 표시되는 구조

-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정제의 약 90%, 리튬 정련의 약 60%, 배터리 부품 생산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어, 공급 조절만으로도 글로벌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적 지위를 확보
 - ※ 광저우기화거래소(GFEX)의 탄산리튬 가격은 글로벌 기준가격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철광석·구리·알루미늄·희토류 등도 중국 거래소 가격이 글로벌 벤치마크 기능을 수행 중
- 가격 결정권 확보와 위안화 결제 확대가 위안화 자산 보유 증가로 이어지도록 하는 구조이며, 중국은 이를 통해 에너지·광물 분야의 달러 의존도를 장기적으로 축소하려는 전략 추진 중
- ▶ 에너지 전환 가속화도 중국의 가격 결정력 확대를 뒷받침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향후 전기차·배터리·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리튬·코발트·희토류·흑연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나, 공급망 상당 부분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어 글로벌 청정에너지 전환 비용 자체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
 - 실제로 2023년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과 리튬 공급 확대 결정 이후 글로벌 리튬 가격이 약 75% 급락했으며, 니켈·코발트·흑연 등 핵심광물 가격도 동반 하락하는 등 중국 정책 변화가 글로벌 광물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반복되는 모습

3. 에너지 패권을 둘러싼 미·중 경쟁 심화 전망

■ 중국 중심 재생에너지 공급망 의존도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경계가 강화되고 있으나, 중남미·중동·아세안·아프리카의 신흥국들에서는 가격이 저렴하고 금융지원이 결합된 중국산 재생에너지 제품에 대한 선호 뚜렷

- ▶ 미국·EU는 최근 중국 중심 청정에너지 공급망 확대를 산업안보·경제안보 차원의 구조적 리스크로 인식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는 모습
 - EU가 올해 3월 발표한 「EU 산업가속화법」 초안에서는 역내 생산 확대, 기술이전, 비중국 공급망 활용 등을 요구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EU 집행위도 중국 등 고위험 국가산 인버터 퇴출에 합의하면서 향후 EU 사이버보안법(Cybersecurity Act)을 통한 강제 규제로 이어질 가능성
 - * 이외 외국보조금규정(FSR, 2023년 시행)에 따라 태양광·배터리·전기차 분야에서 중국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되는 추세
 - 미국은 중국산 배터리·태양광·핵심광물 의존에 대한 견제를 지속 강화해왔으며, 2024년 이후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100%로 상향하고 희토류 자석·배터리·태양광 셀 등에 대한 공급망 통제 확대 및 우회수입 조사 강화 등을 추진 중
 - *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첫날(2025.1.20.) 신규 해상풍력 허가를 즉각 보류·보조금 취소하고, 2025년 1분기에만 약 80억 달러 규모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취소되는 등 반재생에너지 기조를 전방위적으로 강화
- ▶ 반면, 중남미·중동·아세안·아프리카 등 신흥국에서는 가격이 저렴하고 정책금융·인프라 투자가 결합된 중국산 재생에너지 제품에 대한 선호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
 - 중국 기업들은 태양광·배터리·전기차 패키지와 함께 정책금융·현지 공장 설립·전력 인프라 투자 등을 결합하며 개도국 시장 침투를 확대 중

- 실제로 미국·EU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2025년 중국의 신에너지 제품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수출은 크게 증가*하면서 브라질·태국·인도네시아·UAE 등이 주요 성장시장으로 부상
 - * 중국의 대아세안 전기차 수출 전년 대비 약 40% 이상, 중동 수출 약 70% 이상 증가
- BYD 등 중국 기업들은 브라질·태국·헝가리·인도네시아 등에 현지 생산기지 구축을 추진하며 공급망 현지화도 가속화하는 모습
- ▶ 이에 최근 재생에너지 경쟁은 단순 친환경 산업 경쟁을 넘어 ▲핵심광물 ▲정제·가공 ▲기술 ▲제품 ▲금융 ▲현지 인프라를 포괄하는 종합 경제안보 경쟁으로 확대되는 양상
 - 중국은 가격경쟁력과 공급망 통합 능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재생에너지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반면, 미국·EU는 이를 산업안보·경제안보 리스크로 인식하며 중국산 재생에너지 공급망에 대한 견제와 자국 산업 보호를 강화 중
 -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미국이 화석연료 회귀*와 중국과의 재생에너지 공급망 분리를 강화하는 동안, 중국은 중남미, 중동, 아세안,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저가 태양광·배터리·전기차 수출과 현지 생산 확대를 더욱 가속화하는 모습
 - *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재집권 이후 “drill, baby, drill” 기조를 재차 강조하며 원유·가스 생산 확대, LNG 수출 확대, 연방 토지 시추 규제 완화, 일부 IRA 친환경 보조정책 재검토 등을 추진
 - 미국은 동맹국 중심의 안보형 공급망을 강화하고, 중국은 가격경쟁력과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개도국 중심의 녹색산업 공급망 확대를 추진하는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

■ 최근 자원부국들이 미·중 전략경쟁과 공급망 블록화 심화 속에서 자원개발과 경제안보를 동시에 국가 핵심과제로 추진하는 가운데, 이들 지역을 둘러싼 미·중 경쟁 역시 더욱 심화될 가능성

- ▶ 자원부국들에서 단순 원광 수출국에 머무르지 않고, 현지 가공·배터리 소재화·산업 육성을 요구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음
 - 과거처럼 채굴권 제공하고 외화를 확보하는 수준이 아니라, 핵심광물을 기반으로 산업화·고용·정치적 협상력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는 모습
 - 특히 최근 핵심광물 경쟁은 단순 자원 확보 경쟁을 넘어 ▲지분 인수 ▲광산 운영권 ▲현지 가공시설 ▲항만·철도·전력 인프라 ▲정제·배터리 공급망까지 포괄하는 양상으로 발전 중
 - ※ 최근 짐바브웨 정부가 리튬 농축물 등 원자재 수출을 전면 금지한데 이어(2026.2월), 중국 화유코발트(Huayou Cobalt)가 짐바브웨 내에 리튬 황산염 공장을 완공하고 수출을 개시했다고 발표(2026.4월), 가나 등에서도 중국 기업들이 광산 지분 투자와 함께 도로·발전소·항만 등 인프라 패키지를 결합하며 영향력을 확대 중
- ▶ 이러한 상황에서 미·중 경쟁 역시 아프리카·중남미·중양아시아 자원벨트를 둘러싼 지정학적 불력화의 형태로 더욱 본격화될 가능성이 제기됨
 - ※ 콩고민주공화국(DRC) 마노노 리튬 프로젝트에서는 빌 게이츠·제프 베이조스가 투자한 미국계 KoBold Metals가 2025년 5월 10억 달러 규모 투자를 선언하며, 2023년부터 북부 광구를 장악해온 중국 쟈진 마이닝(Zijin Mining)과의 미·중 핵심광물 경쟁 구도가 본격화

■ 중동전쟁을 계기로 해상 물류거점·항만·조선·해운 등 글로벌 운송망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규정하는 미·중 간 경쟁이 한층 가시화·심화되는 양상

- ▶ 2025~2026년 들어 홍해·호르무즈·파나마 운하 등 물류해운 리스크가 동시다발적으로 부각되면서, 중국 역시 해운·항만·조선·물류산업을 국가안보·경제안보 차원의 전략자산으로 인식하는 흐름이 강화
 -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글로벌 해운업계는 우회 운항·보험료 급등·연료비 상승 압박에 직면
 - 세계 최대 해운사 중 하나인 Maersk는 2026년 5월 중동전쟁으로 월간 연료비가 약 5억 달러 증가했다고 밝혔으며, 중국 국영 해운기업 COSCO Shipping 역시 2026년 4월 호르무즈 해협 통행 재개를 보류하는 등 중국 해운업계도 직접적 영향을 받는 모습
- ▶ 미국은 이미 중국의 해운·항만 영향력 확대를 경제안보 및 군사안보 차원의 위협으로 규정하며 견제를 강화 중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4년 중국 조선·해운·물류 산업에 대한 301조 조사 절차를 개시했으며, 중국 정부의 보조금과 산업정책이 글로벌 경쟁을 왜곡하고 있다고 판단
 - 파나마 운하 인근 항만의 운영문제도 미·중 전략경쟁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으며, 미국 정치권은 중국계 기업의 항만 운영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문제 제기
 - * 2026년 파나마 대법원이 홍콩계 CK Hutchison 산하 Panama Ports Company의 기존 항만 운영권을 무효화하고, Maersk·MSC 측에 임시 운영권이 부여되면서 갈등이 본격화. 중국은 파나마 선적 선박 검사 강화, Maersk·MSC 측의 운영 참여 중단 압박 등 해당 사안을 단순 민간 항만 문제가 아닌 전략 물류거점 통제 경쟁으로 인식하는 모습
- ▶ 최근 중국은 미국의 에너지·해운 제재에 대해 보다 공개적이고 강경한 대응 기조를 보이기 시작
 - 미국 재무부는 2025~2026년 중국 산둥 지역 독립 정유소(teapot)와 이란산 원유 운송 네트워크에 대한 제재를 확대했으며, 2026년 4월에는 Hengli Petrochemical 및 관련 선박·해운 네트워크까지 제재 대상으로 지정
 - 이에 중국 상무부는 미국 제재를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역외 제재를 준수하지 않도록 하는 대응조치를 발표(5.2). 이는 중국이 2021년 제정한 「반외국제재법」 및 역외 제재 대응 규정을 에너지·해운 분야에 본격 적용하기 시작한 사례로 평가
 - ※ 미국 역시 중국 금융기관에 대한 2차 제재 가능성을 공개 경고하는 등 압박을 강화 중
- ▶ 결과적으로 최근 중동 사태는 중국에 에너지안보의 핵심은 공급국 확보 자체보다 운송망·항만·해운·조선·금융망을 포함한 종합 해상 공급망 통제력이라는 현실을 더욱 각인시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이에 따라 미·중 경쟁 역시 첨단기술 분야를 넘어, 해상 운송로·항만 인프라·조선·해운·물류 체계를 둘러싼 경제안보 경쟁으로 확대되는 중

4. 한국에 미치는 함의

■ 중국의 에너지안보 강화전략에 따른 영향

- ▶ (공급망 경쟁 구도 변화) 중국의 에너지 자강 전략 가속화는 한국의 대중국 석유화학·철강·배터리 소재 등 중간재 수출 수요를 구조적으로 축소시키는 동시에, 자급률을 초과한 중국의 잉여 생산 능력이 제3국 수출로 전환되어 한국의 해외 시장에서 경쟁을 심화시키는 이중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
 - 발개위 가격사* 부사장 평샤오종(彭绍宗)의 기고문(3.27.)에서는 중동전쟁 이후 고에너지 소비 업종(물류·철강·금속·화학 등) 종합 원가가 15~25% 상승하며, 중소 영세 기업의 수익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란산 원료뿐 아니라 한국 석유화학 공급망 차질로 중국 후방산업과 식량안보가 위협받고 있다고 평가
 - * 중국의 물가, 요금, 에너지 가격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
 - 중국이 에너지안보 강화와 자강(自強) 전략을 통해 대외 의존도 축소를 명시적 국가 목표로 추진하는 만큼, 그간 한국 기업들이 중국과 긴밀하게 형성해온 GVC 연계 구조가 중장기적으로 재편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
 - 특히 석유화학·배터리 소재·철강 등 중국의 자급률 확대가 진행 중인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대중 수출 기반이 구조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제적인 시장 다변화와 공급망 재편 전략 마련이 요구
- ▶ (대중 의존 심화 가능성) 에너지 전환을 위한 중국산 설비·소재 활용 비중이 높아질수록,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안보 문제가 상호 연계될 가능성
 - 중국이 에너지 자강과 함께 희토류·배터리·인버터·태양광 등 저탄소 기술 공급망의 지배력을 전략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을 명시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한국의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 자체가 중국 의존 심화의 경로로 작동할 위험
- ▶ (위안화 에너지 결제 확대의 파급 가능성) 중국이 석유·가스·핵심광물 분야에서 위안화 결제 확대를 지속 추진할 경우, 향후 산유국·자원국 일부가 위안화 결제 생태계에 점진적으로 편입될 가능성
 - 이에 따라 달러 중심 결제 구조에 기반한 한국의 에너지 조달·금융 체계 역시 중장기적으로 다극 통화 체제 전환 압력과 새로운 환율·결제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 존재

■ 미국-중국 전략 경쟁 심화에 따른 우리 기업에의 영향

- ▶ 향후 미국의 화석연료 회귀와 중국의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자강 전략이 맞물리면서, 글로벌 에너지·산업 시장의 분절화가 심화될 작동할 가능성
 - 미국·유럽을 중심으로 중국산 광물·소재에 대한 경계와 배제 요구는 계속 높아지고 있으나, 한국의 배터리·반도체·자동차 산업은 여전히 중국산 흑연·희토류·전구체·정제리튬 등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
 -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은 미국·유럽 시장에서는 중국 우회수출 규제와 공급망 기준 강화에 대응해야 하는 한편, 개도국 시장에서는 중국의 저가공세와 정책금융 패키지 경쟁에 직면하는 이중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

- ▶ 미국과 유럽이 중국 의존 탈피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배터리·원전·전력기·조선·수소·SMR·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 비중국 대안 공급자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 높음
 - 특히, 미국의 에너지 인프라 확대와 반중 공급망 재편은 일부 우리 산업에는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
 - 미국이 LNG 수출 확대, 에너지 인프라 건설, 원전·전력망 투자를 지속 추진할 경우, 한국 조선업계의 LNG선·FLNG·에너지플랜트 경쟁력이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며, 원전·전력망·가스발전 기자재 분야에서도 협력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
 - 실제로 미국·EU·중동 국가들은 중국의 재생에너지 의존을 줄이면서도 완전한 자국 생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한국·일본 기업과의 협력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는 흐름
- ▶ 중동전쟁과 미·중 패권 경쟁이 교차하는 현 국면은 한국에 구조적 취약성을 노출시키는 동시에, 비중국 대안 공급자로서의 전략적 포지셔닝을 재정립할 기회 요인으로도 작용
 - 한국은 ▲에너지·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전략비축 확대 ▲전력망·에너지 인프라 경쟁력 강화 ▲조선·해운·원전·배터리 등 전략산업 육성 ▲개도국 시장 진출 ▲경제안보 법·제도 정비 등을 종합 추진하며, 미·중 공급망 재편 속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할 필요
- ▶ 에너지 의존 구조가 유사한 국가의 대응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급변하는 지정학적 에너지 지형 속에서 어떠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상호 연계 구조를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검토가 요구
 - 일본은 중동 에너지 및 대중 핵심광물 의존 구조가 유사하다는 점에서 한국에 현실적인 참고 모델이 될 수 있으며, 한국과 일본 간 에너지 경제안보 협력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
 - * 일본은 중동전쟁 이후 아세안 국가들에 약 1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금융 지원(국제협력은행·무역보험기구)을 제공하고, 아세안 제로에미션공동체(AZEC) 정상회의를 통해 공급망 안정·원유 조달·핵심광물 협력을 패키지 화하는 등 위기를 경제안보 외교 및 지역 협력 확대의 계기로 활용 중
 - 유럽은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중국 의존 위험을 경계하면서도 공급망 현지화와 산업 경쟁력 확보를 병행 추진 중. 일률적 안보화보다, 관리 가능한 위험과 실질적 안보 위협을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안보·에너지·산업정책을 통합 조정하는 정책 설계의 필요성 시사(Loom Strategy Report, 2026.5)
 - 호주는 에너지 공급망 불안 속에서 자원·식량 분야의 대중 공급 영향력을 기반으로 '상호 의존의 대칭성'을 외교적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 중국이 수출통제를 전략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온 것과 달리, 호주는 상호 의존 구조를 부각하며 협상력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점이 특징
 - * 페니 윙 호주 외무장관은 최근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담에서 중국의 석유제품 공급이 호주의 자원수출에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양국 무역 흐름 유지와 에너지안보의 공동 책임성을 강조(4.29.)

부록

중국의 에너지 다변화 동향

중국은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이자 원유 수입국으로, 중동 지정학 리스크와 미·중 전략경쟁 심화 속에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자급 기반 강화를 동시에 추진 중. 원유 부문에서는 높은 해외 의존도를 보이나, 석탄·재생에너지·원자력·파이프라인가스(PNG)를 기반으로 전체 에너지 체계의 완충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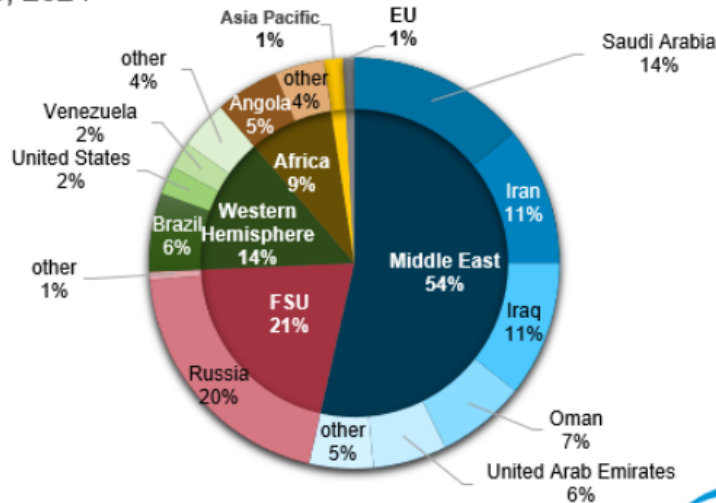
또한, 중국은 할인 원유(러시아·이란·이라크) 활용, 공급망 다변화(브라질·아프리카·캐나다), PNG 확대, 재생에너지 투자 등을 통해 중동 및 미국 중심 에너지 질서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려는 전략을 추진 중

[원유]

- 중국은 원유 소비의 약 70%를 수입에 의존하나, 석탄 중심 구조 덕분에 전체 에너지 기준 자급률은 약 80% 수준 유지. 2024년 기준 러시아·사우디·이라크·이란·말레이시아 등 5대 공급국이 전체 수입의 60% 이상 차지(EIA 기준)

<그림 1> 중국의 원유·콘덴세이트 수입 국가별 구성(2024)

Figure 8. China's crude oil and condensate imports by source, 2024



Data source: Vortexa and Global Trade Tracker
Note: Numbers may not equal 100% due to independent roun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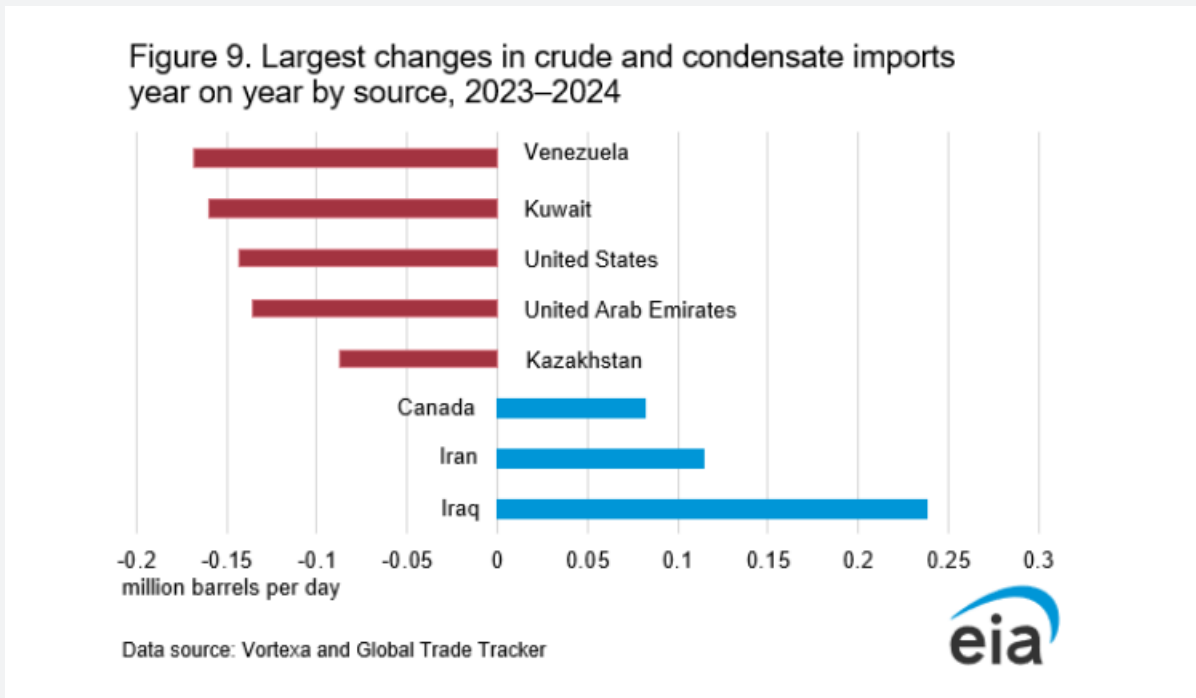


출처 : EIA(2024 기준)

주 : 중국은 여전히 중동 의존 구조를 벗어나지 못했으나, 러시아·이란·브라질·아프리카 등을 활용해 미국 중심 에너지 질서에 대한 전략적 완충망을 구축 중

- 중국은 중동 의존도를 완전히 탈피하지는 못했으나, 러시아·브라질·아프리카 등으로 공급망 다변화를 지속 추진 중
- 특히 말레이시아는 이란·러시아·베네수엘라산 원유의 우회 수출 통로 역할을 수행 중이며, 선박간이전(STS)과 다크 플릿(dark fleet)을 활용한 비공식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평가
- 브라질산 원유는 호르무즈·말라카 해협을 우회 가능한 대서양 항로 활용이 가능하고, 중국 정유사 선호도가 높은 저유황 원유라는 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상승 중
- 아프리카 역시 앙골라·콩고 등을 중심으로 ‘자원-인프라 교환’ 구조를 기반으로 장기 공급망 다변화 축으로 기능

<그림 2> 최근 중국의 원유 수입 변동비교(2023-2024, 전년 대비)



출처 : EIA(2024 기준)

주 : 이라크·이란·캐나다 수입 확대, 베네수엘라·쿠웨이트·UAE·미국 수입 감소. 할인 원유(이라크·이란) 및 비중동 공급원(캐나다) 확대, 미국산 원유 수입 축소 두드러짐

[가스]

- 중국의 가스 구조는 LNG 중심에서 PNG·국내 생산 확대 중심으로 전환 중이며, 이는 최근 지정학 리스크 국면에서 중국 에너지안보의 핵심 완충 요인으로 평가

<LNG>

- 2025년 기준 카타르·호주가 각각 약 20% 내외의 비중으로 핵심 공급국이며, 말레이시아가 뒤를 잇는 구조

- 러시아 LNG 비중은 Arctic LNG 2 등 북극권 프로젝트 확대와 함께 증가 중이며, 중국은 이를 중장기 전략 차원에서 강화
- 반면 미국산 LNG는 미·중 갈등과 상호 관세 이후 급격히 감소한 상태로, 중국은 이를 카타르·러시아·호주 물량으로 대체
- 다만 LNG는 중국 전체 가스 공급의 약 25% 수준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국내 생산과 PNG가 충당한다는 점에서 한국·일본과 차별화

<PNG>

- PNG 공급은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두 축 중심으로 운영. 러시아의 ‘시베리아의 힘(Power of Siberia)’은 2025년 연 380억㎥ 공급 목표로 운영 중이며, 연 500억㎥ 규모의 ‘시베리아의 힘 2’는 중국의 핵심 중장기 에너지안보 사업으로 평가
- 중앙아시아 가스관(CAGP)을 통한 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산 PNG도 핵심 축이며, 미얀마 가스관은 보완적 역할 수행
- 이러한 구조 덕분에 중국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에도 러시아 PNG·호주 LNG·국내 생산을 통해 한국·일본 대비 상대적으로 충격 흡수 여력이 크다는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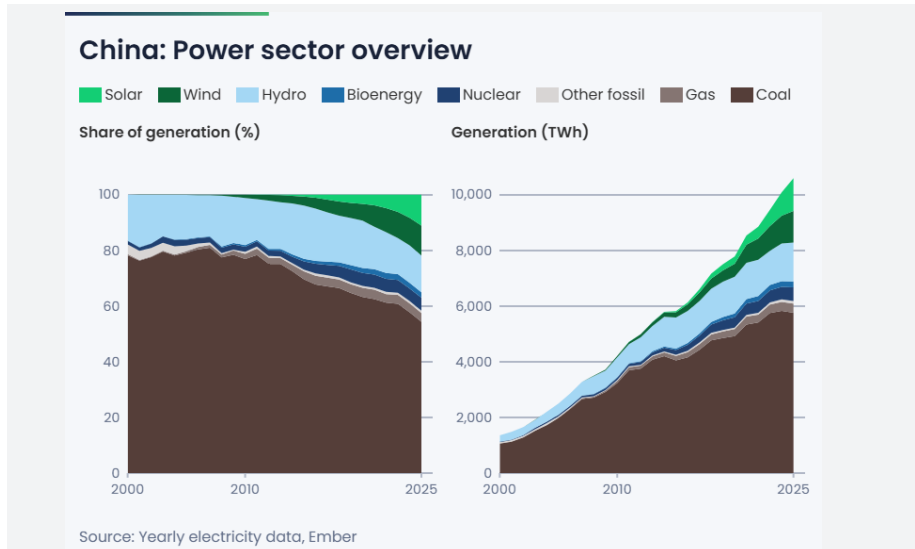
[석탄]

- 중국은 세계 최대 석탄 생산·소비국으로, 전체 발전량의 약 60%를 석탄이 담당. 중동 위기 이후 중국 정부는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일부 광산 재가동과 생산 확대 조치를 추진 중
- 생산은 산시성·내몽골·신장 등 내륙에 집중된 반면, 소비는 연해 제조업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물류 비효율 문제가 존재
- 이로 인해 일부 연해 발전소는 내몽골산 석탄 철도 운송보다 인도네시아·호주산 해상 수입을 더 저렴하게 활용하는 구조 형성

[전력·재생에너지]

- 중국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국가 전략의 핵심 축으로 추진 중이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0년 29%에서 2024년 35% 수준까지 상승
- 2025년 초에는 태양광·풍력 발전설비 용량이 사상 처음으로 화력발전 설비를 추월한 것으로 발표되었으며,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수입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려는 전략 추진 중
- 중국 정부는 2030년까지 비화석에너지 소비 비중 25% 이상 확대를 목표로 제시했으나, 서부 발전지와 동부 소비지 간 송전망 부족이 구조적 병목으로 지적
- 이에 따라 중국은 초고압(UHV) 송전망과 전력망 인프라 투자 확대를 지속 추진 중

<그림 3> 중국의 발전원별 구성 및 발전량 추이(2000~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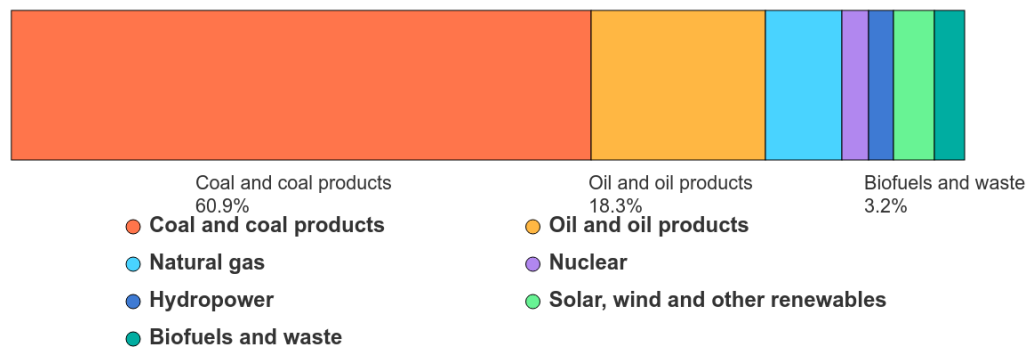


출처 : Ember(2025)

주 : 석탄 발전 비중은 2000년대 초 약 80%에서 2024년 약 60%로 축소된 반면, 태양광·풍력 비중이 동 기간 급격히 확대되어 재생에너지 합산 비중이 약 35%를 초과

<그림 4> 중국의 1차에너지 공급원별 구성(2023)

Total energy supply, China, 2023



Source: International Energy Agency. Licence: CC BY 4.0

출처 : IEA(2023 기준)

주 : 석탄 및 석탄 제품이 전체 1차에너지 공급의 60.9%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며, 석유·석유 제품(18.3%)이 2위. 천연가스·수력·원자력·태양광·풍력 등 비화석 및 저탄소 에너지원의 합산 비중은 약 20% 수준에 불과. 석탄 중심의 에너지 구조가 고착되어 있어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음에도 전체 에너지 자급률이 약 80%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보여줌

참고문헌

- EIA. (2024). China's Crude Oil and Condensate Imports by Source, 2024 [Figure 8].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Vortexa·Global Trade Tracker 기반)
- EIA. (2024). Largest Changes in Crude and Condensate Imports Year on Year by Source, 2023–2024 [Figure 9].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Vortexa·Global Trade Tracker 기반)
- Ember. (2025). China: Power Sector Overview — Yearly Electricity Data. Ember Climate.
- IEA. (2025). China Electricity.
<https://www.iea.org/countries/china/electricity> (검색일: 2026.5.7.)
- The China Academy. (2025). China's Energy Security: Realities and Green Ambitions.
<https://thechinaacademy.org/chinas-energy-security-realities-and-green-ambitions> (검색일: 2026.5.7.)
- Collins, M., & Meidan, M. (2026). Dependence: The National Security Risks of China's Role in Europe's Energy Transition. Loom Strategy / New Energy Industrial Strategy (NEIS) Center
- 彭绍宗. (2026.03.30.). 中东局势下大宗商品保供稳价：形势研判与分级分类应对建议. 中国宏观经济学会.
<http://zghgjj.com/?m=content&c=index&a=show&catid=369&id=9619> (검색일: 2026.5.7.)
- 中国建投投资研究院. (2026.4.13). 建投洞察 | 中东局势跌宕，如何扰动全球市场? 新浪财经.
<https://finance.sina.com.cn/wm/2026-04-13/doc-inhukknv9611039.shtml> (검색일: 2026.5.7.)
- 郑栅洁. (2026.04.20.). 持续提升国家经济安全保障能力 以新安全格局保障新发展格局. 人民日报, 11면.
http://paper.people.com.cn/rmrb/pc/content/202604/20/content_30152080.html (검색일: 2026.5.7.)
- Xinhua News Agency. (2026.4.20). Chinese premier calls for improving energy structure. The State Council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FT. (2026.04.14.). China orders Musk and MSC to withdraw from Panama port operations.
- The Economist. (2026.04.20.). The world wants Chinese technology. China is determined to keep it.
- FT. (2026.04.20.). Global automakers race to absorb Chinese technology through reverse transfer.
- The Economist. (2026.04.21.). Why China's exports keep rising: structural competitiveness survives Trump tariffs.
- FT. (2026.04.22.). Chinese EVs push into smaller cities, eyeing mass-market dominance.
- FT. (2026.04.27.). China's critical minerals: coercive leverage but still the cheapest option.
- WSJ. (2026.04.28.). Chinese cars are banned in the US — but they're already across the border in El Paso.
- FT. (2026.04.29.). Chinese green technology poses national security risks for Europe, Loom report warns.
- FT. (2026.04.29.). MingYang calls UK's offshore wind turbine ban a political move, vows to press ahead in Europe.
- FT. (2026.04.29.). Indonesia eyes aluminium market dominance backed by Chinese capital.
- FT. (2026.04.28.). China prepares to resume exports of jet fuel, diesel and petrol from May.
- Bloomberg. (2026.04.29.). Australia tells China stable trade needs stable fuel supply.
- FT. (2026.04.29.). Chinese green technology risks becoming a national security threat for Europe.

- FT. (2026.04.29.). MingYang calls UK offshore wind turbine ban political, vows European expansion.
- The Economist. (2026.04.30.). The global race to secure ports as China tightens its grip on supply chains.
- The Economist. (2026.05.03.). Global automakers desperately want to be more like Chinese rivals — but partnerships come with risks.
- The Economist. (2026.05.04.). China sees America as declining but still uniquely dangerous.

저자 소개

임산호 | shlim22@mofa.go.kr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선임전문관으로 재직 중이다. 관심 주제는 국제경제, 국제금융, 산업 공급망, 에너지이다. 주요 논문으로 “Optimal bond holding dynamics with hedging against real exchange rate risks”, *International Review of Economics & Finance* (2023),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가 한국의 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에 미친 영향 분석” 『무역학회지』 제49권 제5호 (2024), “The Effects of Risk-hedging Motives and Trade Costs on Foreign Bond Holdings”, *International Economic Journal* (2025)가 있다

미국·유럽 전략 기술 투자심사의 공통 과제와 시사점

이재원 선임전문관

요약

■ AI, 반도체, 퀀텀 등 전략 기술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존 수출통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투자심사(investment screening)가 새로운 기술 안보 수단으로 부상

- ▶ 수출통제가 품목, 서비스의 국경 간 이동을 규제한다면, 투자심사는 기업 인수합병 등을 통한 기술 탈취와 전략 인프라 침투를 차단하는 보완적 기제로 등장
- ▶ 주요국들은 외국인투자심사(inbound)를 강화하는 동시에, 자국 자본이 우려국의 첨단기술 생태계 구성에 기여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해외투자심사(outbound)도 모색

■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EU 등의 투자심사 제도는 설계 원칙에서 차이가 있으나, 다섯 가지 공통 과제에 직면

- ① 개별 거래의 누적 효과 탐지 : 건별 심사 체계의 구조적 한계로, 소규모 지분 투자의 반복·누적이 전략 자산에 미치는 영향력을 포착하기 어려움
- ② 비지분 경로 심사 : IP 라이선싱·합작투자·핵심 인력 유치 등은 실질적 기술 이전 효과를 내지만 외국인투자로 분류되지 않아 심사 범위 밖에 존재
- ③ 핵심 기술의 보존 : 투자 차단 이후 신뢰할 수 있는 우호국·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차단 성공이 기술 보존으로 이어지지 않고 생산 중단으로 이어지는 부작용 발생
- ④ 동맹국 간 정보 공유 강화 : 투자심사에 특화된 정보 공유 메커니즘이 부재하여 동일 투자자가 복수국에 동시 투자하는 패턴 탐지 제약
- ⑤ 제3국 경유 투자 심사 : 현행 투자심사 제도가 법인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EU 역내 자회사를 통한 외국인투자심사 우회(EU 워싱)와 제3국 법인화를 통한 해외투자심사 우회(싱가포르 워싱)를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

■ 한국은 주요국이 직면한 공통 과제를 참고하여 투자심사 협력을 위한 대응 준비가 필요하며, 이는 단순한 제도 도입을 넘어 외교·투자심사·산업정책의 연계를 요구하는 복합적 과제

- ▶ 누적 효과 탐지 및 비지분 경로 심사와 관련하여, 영국 「국가안보투자법(NSIA)」처럼 자산 이전 자체를 심사 대상으로 포함하거나 미국 「해외투자심사법(COINS Act)」처럼 합작투자를 명시적 규제 대상으로 삼는 방향 검토 필요

- ▶ 핵심 기술 보존 과제와 관련하여, 투자 차단 결정 시 신뢰 가능한 대안 매수자를 사전 발굴·연결하는 메커니즘 검토 필요
- ▶ 제3국 경유 투자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 핵심 기업의 기술·인력이 제3국 법인화를 통해 유출되는 경로를 사전 모니터링하는 체계가 필요하며 법인 소재지보다 실질 지배자·기술 원산지를 기준으로 관할권을 설정하는 접근 방식 참고 가능
- ▶ 동맹국 간 정보 공유 측면에서는 미국의 외국인투자심사위원회(CFIUS) 국제 실무그룹, EU의 공동 데이터베이스 등 기존 동맹국 협력 체계에 참여할 수 있는 외교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선행 과제

■ **현재 해외투자심사를 입법화한 국가는 미국이 유일하며, 영국, 독일 등 유럽 주요국 및 EU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제도화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어 투자심사의 inbound·outbound 비대칭 구도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

- ▶ 이 같은 비대칭은 미국의 「해외투자심사법(COINS Act)」을 우회하기 위해 제3국 법인화가 확산되는 구조적 공백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향후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제도화 압력이 나타날 가능성 존재
- ▶ 한국 기업이 미국 자본·파트너와의 첨단기술 협업을 심화할수록 대중국 투자 결정이 미국 측 파트너의 규제 준수 문제와 충돌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한국 자체적인 해외투자심사 제도의 중장기 검토 필요

■ **국내 핵심 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적절히 보호하면서도 필요한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는 균형 잡힌 투자심사 체계의 설계가 중장기 과제이며, 이 과정에서 영국·네덜란드의 번영과 안보의 양립 설계 원칙 참고 가능**

1. 전략 기술 관련 투자심사 제도의 확산

■ **AI·반도체·퀀텀 등 전략 기술이 국가안보 및 경제안보의 사활적 변수로 부상함에 따라, 전통적 수출통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FDI 및 벤처캐피탈을 통한 우회적 기술 획득 경로를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공감대 확산**

- ▶ 수출통제가 전략 품목과 서비스의 국경 간 이동을 규제한다면, 투자심사는 기업의 거버넌스 장악을 통한 내부적 기술 탈취와 전략적 인프라 침투를 원천 봉쇄하는 기제로 등장
 - 투자심사제도 부재에 따른 전략 기술 유출의 대표적 사례는 독일의 KUKA 사례로, 2016년 중국 기업 메이디(Midea)가 독일 산업용 로봇 기업 KUKA를 50억 달러 이상에 100% 인수 하였으며, 당시 독일 정부는 심각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차단할 법적 수단 부재

- 또한 네덜란드의 대표적 반도체 기업인 NXP의 2015년 표준제품 사업부를 중국 자본 컨소시엄이 인수하여 Nexperia를 설립하였으며, 이후 2019년 중국의 Wingtech이 지분 전량을 확보하였으나, 네덜란드 투자심사법 도입 이전에 발생하여 소급 적용 불가
- ▶ 투자심사는 안보 위협의 방향성에 따라 외국인투자심사(inbound)와 해외투자심사(outbound)로 다각화되면서 기술 보호를 위한 주요 도구로 부상
 - 외국인투자심사는 우려국의 자본이 국내 핵심 기업의 지분을 확보하여 전략 기술을 탈취하거나 공급망의 의사결정권을 장악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어적 조치
 - 해외투자심사는 자국의 자본과 노하우가 우려국의 첨단 기술 생태계 구성에 기여하여 장래의 안보 위협으로 되돌아오는 부메랑 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공세적 조치

■ 주요국들은 법령 개정 및 신규 법제화를 통해 투자심사 체계를 정비 중인 상황

- ▶ 미국은 2018년 「외국인투자리스크검토현대화법(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FIRRMA)」을 통해 정부가 심사 기준인 국가안보 위협을 유연하고 광범위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한데 이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 우선 투자 정책』 각서에 따라 동맹국·적성국 투자를 명시적으로 차별화하는 이원적 트랙을 공식화하고 심사 효율화를 추진 중
 - 한편 2025년 12월 미 의회는 「포괄적해외투자국가안보법(Comprehensive Outbound Investment National Security Act, COINS Act)」으로 해외투자심사의 법적 연속성 확보
 - ※ COINS Act : 기존 재무부 규정과 유사하나, 반도체·AI·퀀텀 외 고성능 컴퓨팅·극초음속 추가, 적용국 확대(러시아, 이란, 북한 등), 이행 규정을 2027년 3월까지 마련토록 의무화
- ▶ 영국은 2002년 기업법에 기반한 투자심사를 대체하는 「국가안보투자법(National Security and Investment Act, NSIA)」을 2022년 1월부터 시행
 - 영국은 국가안보와 번영은 상충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완전한 차단보다는 조건부 승인을 우선하며, 해외투자심사는 별도 입법 없이 주요국 제도 변화 모니터링
- ▶ 독일은 「대외무역법(Außenwirtschaftsgesetz, AWG)」 및 그 시행령(AWV)에 따라 외국인투자심사 시 국가안보에 대한 실제적 위협의 직접 입증 없이 안보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리스크 예측만으로 정부 개입 가능
 - 또한 2026년 중반까지 기존 법령(AWG·AWV)을 통합하는 『투자심사법(Investitionsprüfungsgesetz, IPG)」 시행을 목표로 지식재산권(IP) 거래 및 그린필드 투자까지 심사 범위를 확대
- ▶ 네덜란드는 2023년 「일반투자심사법(Vifo Act)」을 시행 중으로, 법적 확실성, 비례성, 특정성을 최우선하고, 소규모 개방 경제의 특성상 투자 환경 보호를 위해 의도적으로 법에 명시된 부문과 행위만 심사 가능토록 하며, 정부의 재량적 개입 권한은 미부여
- ▶ EU는 2019년 FDI 심사 규정(Regulation 2019/452) 도입 후, 단일시장 내 불확실성과 회원국 간 규제 차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2024년 1월 EU집행위가 FDI 심사 규정 전면 개정안을 제출

- 향후 전 회원국이 FDI 심사를 자발적 협력 체계에서 최소 범위에 대한 심사 의무화로 전환하고, EU 자회사를 통한 우회 투자(역내 EU 투자자가 역외 지배를 받는 경우)도 심사 대상에 포함

※ 의무 심사 최소 범위 : ▲이중용도 품목·군사 장비 ▲하이퍼크리티컬 기술 ▲핵심 원자재 ▲주요 인프라 등

- 동 보고서는 미국, 영국, 독일, EU의 사례를 바탕으로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는 전략 기술 관련 투자심사 제도의 공통 과제를 살펴보고, 한국에 대한 함의를 도출

2. 미국과 유럽 투자심사의 공통 과제

- 미국, 영국, 독일, EU 등의 투자심사 제도는 설계 원칙과 운영 방식에서 차이가 있으나, 현행 건별 심사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첨단기술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다음의 공통 과제에 직면

- ① 개별 거래의 누적 효과 탐지 : 주요국의 투자심사는 개별 거래를 단위로 심사하는 건별 체계를 기본으로 하여, 각각의 거래가 안보 문제를 유발하지 않더라도 여러 거래가 누적되어 전략 자산에 실질적 영향력을 형성하는 패턴을 포착하기 어려움

- 첨단기술 스타트업에 대한 소규모 지분 투자를 반복하거나, 동일한 투자자가 복수의 국가에서 동시에 투자를 진행하여 누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

- (미국) 외국인투자심사위원회(CFIUS)는 비신고 거래 전담팀을 확대하여 2024년 수천 건의 비신고 거래를 예비 검토한 후 98건을 추가 조사하고 76건에 대해 공식 조사를 개시(2023년 60건 대비 증가)

※ '22년 바이든 행정명령 14105호에서 CFIUS가 개별 거래가 아닌 누적 패턴을 고려하도록 명시

- (EU) 2026년 2월 잠정안이 공개된 신규 FDI 심사 규정은 공동 데이터베이스를 도입하고 복수 회원국 동시 투자 패턴 탐지를 목표로 설정한다는 계획

- (독일) EU 협력 메커니즘을 통한 독일의 통지 건수는 2025년 451건으로 2024년(308건) 대비 46% 증가하였으며, 동일 투자자의 복수국 투자 정보를 통해 EU 회원국 간 공조를 추진

- ② 합작투자 등 비지분 경로 심사 : 외국 기업이 직접 인수하는 대신 합작법인을 설립하거나 라이선싱 계약을 통해 기술에 접근하는 방식이 수출통제와 투자심사를 동시에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대응 필요

- IP 라이선싱, 합작투자(joint ventures), 핵심 인력 유치 등 지분 취득을 수반하지 않는 기술 이전 경로는 현행 투자심사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이러한 방식은 주식 취득 없이도 기술 이전 효과를 내지만 외국인투자자로 분류되지 않아 심사 대상에서 제외

- AI·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핵심 인력·지식의 이전이 투자 형식보다 중요한 기술 유출 경로로 부상

- (미국) 「해외투자심사법(COINS Act)」에 합작투자(joint ventures)를 해외투자 규제의 금지·신고 대상으로 명시하여 비지분 경로를 처음으로 포함하였으며, CFIUS도 이중용도 기술의 리스크를 사전 식별하는 투자심사 기술 이니셔티브(ISTI)와 기업의 자발적 공급망 정보 공유를 유도하는 전략적 공급업체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비지분 기술 이전 경로를 간접 모니터링
 - (영국) 「국가안보투자법(NSIA)」를 통해 기업 인수뿐만 아니라 자산(IP, 소프트웨어, 아이디어)의 이전 자체를 심사 대상으로 규정하여 라이선싱 계약을 직접 통제
 - (독일) 2026년 중반 발표 예정인 「투자심사법(IPG)」 초안에 기업 지분 인수를 수반하지 않는 IP 라이선싱, 연구 협력 계약, 자산 양도 등 비투자 형태의 기술이전도 심사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외국인 판단 기준을 거주지에서 국적으로 전환하여 국적 위장을 통한 우회를 차단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
- ③ **핵심 기술의 보존** : 투자심사를 통한 거래 차단이 반드시 전략 자산의 보존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역설이 제기되어 정책적 보완 필요
- 인수 차단 후 자금 조달이 막힌 기업이 사업을 중단하면 차단의 목적이었던 핵심 기술 자체가 소멸하는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 우려
 - (미국) CFIUS는 기존 완화 조건 계약을 능동적으로 검토하여 국가안보상 필요성이 소멸한 경우 조건을 선제적으로 종료하는 이니셔티브를 추진 중
 - (독일) 완전 차단을 항상 최후의 수단으로 설정하고 제3자 이행 감시자(third-party monitor) 지정을 통한 유연한 운영을 선호하나, 기술 보존 실패를 경험

[거래 차단 후 핵심 기술 보존 실패 및 성공 사례]

구분	내용
기술 보존 실패: 독일 MAN Energy Solutions 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독일은 중국 국유기업 CSSC 산하 Longjiang GH Gas Turbine Co.로의 가스터빈 매각을 군사적 전용 가능성 확인 후 차단 • 이후 MAN Energy Solutions는 차단 직후 가스터빈 신규 개발을 중단하고 생산도 단계적으로 종료하겠다고 발표 • 차단이 기술 보존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핵심 기술의 소멸 초래
기술 보존 성공: 영국 넥스페리아·NW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영국은 국가투자안보법(NSIA)을 소급 적용하여 넥스페리아에 뉴포트웨이퍼팩(Newport Wafer Fab, NWF) 지분 86%의 매각 명령 • 500명 이상의 고용 불안과 납세자 비용 1억 파운드 이상의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이후 미국 반도체 기업 Vishay Intertechnology에 매각 성사 • 파운드리 운영이 지속되었으며, 신뢰 기업으로의 이전을 통해 기술 보존에 성공 사례로 평가

두 사례의 대비는 차단 이후 신뢰할 수 있는 매수자 확보 여부가 핵심 기술 보존의 성패를 결정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투자심사 결정 시 차단 이후 계획을 병행 수립해야 함을 의미

자료: Bloomberg. (2024.7.2.), UK Cabinet Office. (2022.11.16.).

④ 동맹국 간 정보 공유 강화 : 개별 국가 차원의 심사는 동일 투자자가 여러 국가에서 동시 진행하는 투자의 전체 그림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 노정

- 투자심사에 특화된 동맹국 간 정보 공유 메커니즘이 부재한 상황으로, 역외 중개법인과 유명회사를 통한 실질 지배자(Ultimate Beneficial Owner, UBO) 파악의 어려움과 결합되어 복수국 동시 투자 패턴의 탐지 제약
- (미국) CFIUS 내 국제 실무그룹이 동맹국과의 투자 패턴 공유를 위해 협의하며, 무역협정에 투자심사 기준·정보를 포함시키는 추세도 가시화(예. USMCA 검토 과정에서 경제안보 조항 논의)
- (EU·독일) EU 신규 FDI 심사 규정을 통해 공동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계획하고, 독일이 주도하는 EU 이사회 실무그룹에서 회원국 간 구조적 공조 강화도 논의
- (영국) 「국가투자안보법(NSIA)」의 준수법적 절차 특성상 진행 중인 사안의 정보 공유에 제약이 있으나, 외교 채널을 통해 우려를 공유

■ 추가적으로 현행 각국의 투자심사 제도는 법인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권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제3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심사를 회피하는 전략을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에도 직면

⑤ 제3국 경유 투자 문제 : 성격이 다른 EU 워싱(EU washing)과 싱가포르 워싱(Singapore washing) 등 두 가지 유형으로 가시화

- (EU 워싱) EU 역내 자회사를 통한 외국인투자심사 우회 문제로 비EU 자본이 EU 역내에 자회사를 설립한 후 그 자회사를 통해 EU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역내 거래처럼 보이지만 실질적 지배는 역외에 있어 기존 심사 체계에서 포착이 난해

[EU 워싱의 주요 사례와 최근 EU의 대응]

구분	내용
넥스페리아·NWF (영국, 20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윈텍이 지배하는 네덜란드 법인 넥스페리아가 영국 최대 파운드리 뉴포트웨이퍼팹(Newport Wafer Fab, NWF)을 인수 • 영국 정부는 NSIA를 소급 적용하여 인수 무효 및 지분 매각을 명령 • 법인 소재지(네덜란드)와 실질 지배자(중국)의 괴리를 이유로 심사 관할권을 확장한 사례
Elmos Semiconductor (독일, 20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계 Sai Microelectronics의 스웨덴 자회사 Silex Microsystems가 독일 자동차용 반도체 제조업체 Elmos를 인수하려 했으나 독일연방경제기후부(BMWK)가 차단 • 스웨덴 자회사를 통한 우회를 독일이 저지
최근 EU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신규 FDI 심사 규정에 지배구조 투시(Look-through) 조항과 간접 투자 통제를 명시적으로 포함 • EU 역내 자회사라도 실질 지배자가 역외에 있으면 외국인투자자로 간주

자료: CNN Business. (2022.11.25.), UK Cabinet Office. (2022.11.16.).

- (싱가포르 워싱) 제3국 법인화를 통한 해외투자심사 우회 문제로 중국계 기업이 싱가포르 등 제3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우려 국가 기업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미국의 해외투자심사 적용을 우회(미국 자본 유치)하는 방식

[싱가포르 워싱의 최근 사례: 미국 메타의 중국계 기업 마누스 인수 및 중국의 불허]

구분	내용
메타-마누스 사례 (2025~202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베이징에서 창업한 마누스(Butterfly Effect)는 2025년 4월 美 VC Benchmark로부터 7,500만 달러 투자를 유치한 후 2025년 7월 싱가포르로 이전 • 2025년 12월 美 메타가 약 20억 달러에 인수를 완료하였으나, 중국 외상투자안전심사판공실은 2026년 1월 심사에 착수하여 2026년 4월 27일 취소·원상복구 명령을 발부 • 중국은 법인 소재지(싱가포르)와 무관하게 기술의 중국 기원을 근거로 외국인투자심사 관할권을 행사. '법인 등록지가 아닌 기술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관할권을 확장한 최초의 공개 사례 • 미국 재무부 OISP도 싱가포르 법인임에도 기술 기원(중국)을 기준으로 해외투자 안보 심사에 착수하여, 법인 소재지보다 기술 원산지를 우선하는 접근을 적용 • 결과적으로 싱가포르 법인화는 중국의 외국인투자심사(inbound)와 미국의 해외투자심사(outbound) 양측의 심사망을 동시에 우회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
EU 워싱 및 싱가포르 워싱 두 유형 모두 공통적으로, 기술의 실질적 귀속과 실질 지배자를 법인 소재지보다 우선하는 방향으로 심사 관할권을 확장하는 추세를 제시	

- 다섯 가지 공통 과제(개별 거래의 누적 효과 탐지, 합작투자 등 비지분 경로 심사, 핵심 기술의 보존, 동맹국 간 정보 공유 강화, 제3국 경유 투자 문제)는 주로 외국인투자심사(inbound)에 해당하며, 해외투자심사(outbound)는 현재 미국이 유일하게 법제화한 상황으로 이하 3절에서 그 시사점을 검토

3. 전망과 시사점

■ 첨단기술 경쟁이 심화될수록 투자심사의 전략적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전망

- ▶ 미국이 선도하는 투자심사는 ▲CFIUS의 외국인투자심사 집행 강화, ▲COINS Act를 통한 해외 투자심사 법제화, ▲신뢰할 수 있는 투자자를 위한 패스트트랙이라는 세 축으로 구조화면서 동맹국에 대한 제도적 수렴 압력도 증대될 가능성 존재
- ▶ EU는 2027년 하반기 신규 FDI 심사 규정 전면 적용을 계기로 역내 제도 조화를 달성하는 동시에 역외 자회사를 통한 우회 투자 차단 효과를 통해 실효성을 제고할 전망
 - 독일, 프랑스가 주도하는 EU 회원국간 투자심사 제도 조화는 한국 기업의 EU 진출 환경에도 영향을 줄 것이며, EU 회원국별 심사 요건 차이가 줄어드는 반면에 공통 최소 부문에 대한 심사 강도는 높아질 전망

- ▶ 주요국 공통으로 심사 건수 증가→집행 역량 강화→기술 범위 확대의 선순환이 진행 중으로 이는 첨단기술 분야의 국경을 초월한 M&A, 투자 환경을 구조적으로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미국 CFIUS의 경우 총 심사건수는 2022년 440건 → 2024년 325건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비신고 거래 조사 개시는 76건('24년)으로 집행이 질적으로 강화되는 추세
 - 영국 1,143건('24-25년 회계연도 기준, 이전 회계연도 대비 26% 증가)이 신고되었으며, 독일 2025년 역대 최다인 339건 심사('19년 106건 대비 3배 이상 증가), 네덜란드 69건('24년 신규 신고 기준, 시행 첫 해인 '22년 8건 대비 급증)

■ 한국은 주요국이 직면한 공통 과제에 대한 대응 준비가 필요하며, 이는 단순한 제도 도입을 넘어 외교·투자심사·산업정책의 연계를 요구하는 복합적 과제

- ▶ 누적 효과 탐지 및 비지분 경로 심사와 관련하여, 현행 한국의 투자심사 제도는 개별 거래·지분 취득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소규모 반복 투자나 IP 라이선싱·연구 협력을 통한 기술 유출에 취약할 수 있고, 영국 NSIA처럼 자산 이전 자체를 심사 대상으로 포함하거나 미국 COINS Act처럼 합작투자를 명시적 규제 대상으로 삼는 방향 검토 필요
- ▶ 핵심 기술 보존 과제와 관련하여, 투자 차단 결정 시 신뢰 가능한 대안 매수자를 사전 발굴·연결하는 메커니즘을 검토하는 것이 요구되며, 독일 MAN 사례(차단→기술 소멸)와 영국 NWF 사례(신뢰 기업 이전→기술 보존)의 대비점은 이러한 준비의 중요성을 명확히 제시
- ▶ 제3국 경유 투자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 핵심 기업의 기술·인력이 제3국 법인화를 통해 유출되는 경로를 사전 모니터링하는 체계가 필요하며 법인 소재지보다 실질 지배자·기술 원산지를 기준으로 관할권을 설정하는 접근 방식 참고 가능
- ▶ 동맹국 간 정보 공유 측면에서는 미국의 CFIUS 국제 실무그룹, EU의 공동 데이터베이스 등 기존 동맹국 협력 체계에 참여할 수 있는 외교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선행 과제
 - 미국이 무역협정 내 투자심사 조항을 명문화하는 경제-안보 연계 추세를 고려할 때, 한미 간 투자심사 정보교류 채널을 조기에 제도화함으로써 향후 협상에서 주도적 위치 선점 및 공급망 상호운용성 강화 필요

※ 미국은 2025년 11월 엘살바도르·과테말라와 체결한 상호무역협정 프레임워크에 투자심사 협력 조항을 표준 항목으로 포함시켰으며, 2026년 USMCA 재검토 과정에서도 동일한 방향의 제도화가 논의 중

■ 현재 해외투자심사를 입법화한 국가는 미국이 유일하며, 영국, 독일 등 유럽 주요국 및 EU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제도화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어 투자심사의 inbound-outbound 비대칭 구도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

- ▶ 이 같은 비대칭은 위에서 언급한 마누스의 싱가포르 워싱 사례에서 보듯이 미국의 COINS Act를 우회하기 위해 제3국 법인화가 확산되는 역설적 상황이 나타날 수 있으며, 향후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제도화 압력은 중장기적으로 증가할 전망

- 한국 기업이 미국 자본 유치나 미국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첨단기술 생태계에 깊이 편입될수록, 관련 투자 구조에서 COINS Act의 적용을 받는 미국인이 포함될 가능성도 증가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 결정이 미국 측 파트너의 규제 준수 문제와 맞물릴 수 있으므로 이러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 자체적인 해외투자심사 제도의 필요성도 중장기적인 검토 과제로 부상

▶ 또한 2027년 3월까지 COINS Act 이행 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동맹국 자본의 취급 방식이 주요 이슈로 부상할 수 있으므로 협의 창구 확보 및 제도적 조화 모색 필요

- 향후 해외투자심사 도입 논의가 가시화될 경우, 양국 간 우려 대상국 및 핵심 기술 목록에 대한 상호 인식을 일치시킴으로써, 우리 기업의 대외 투자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전략 필요

■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 제조업 분야의 글로벌 공급망 핵심 기업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나, 투자심사 제도의 체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주요국과의 투자심사 협력을 위한 상호 호환 가능한 제도 정비 필요

▶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에 대한 패스트트랙을 확대하는 흐름 속에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에 대한 간소화 혜택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상응하는 제도적 신호 발신 필요

- 미국의 경우 무역협정 내 투자심사 조항을 삽입하는 추세로, 상호 무역 협정에 투자심사 기준과 정보를 포함시키는 흐름이 가시화되고 있고 USMCA 검토 과정에서도 경제안보 조항 논의가 진행 중인 점도 참고 필요

▶ 동시에 국내 핵심 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적절히 보호하면서도 필요한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는 균형 잡힌 투자심사 체계의 설계가 중장기 과제이며, 이 과정에서 영국·네덜란드의 번영과 안보의 양립 설계 원칙 참고 가능

참고문헌

[독일]

-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2025). Annual Report to Congress: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CY 2024).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https://home.treasury.gov/system/files/206/CFIUS-2024-Annual-Report.pdf>
- White House. (2025.2.21.). America First Investment Policy [대통령 각서]. The White House.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2/america-first-investment-policy/>
- U.S. Congress. (2025.12.18.). Comprehensive Outbound Investment National Security Act of 2025 (COINS Act). In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6, Pub. L. No. 119-60, Title LXXXV. U.S. Government Publishing Office. <https://www.congress.gov/bill/119th-congress/senate-bill/1071/text>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5).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CFIUS). (No. IF10177).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https://crsreports.congress.gov/product/pdf/IF/IF10177>
- Kilcrease, E. (2025.4.28.). Demystifying CFIUS: A Conversation with Assistant Secretary Chris Pilkerton[대담 영상].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CNAS). <https://www.youtube.com/live/gbZXIJva0kl?si=XoG5esnXjFtJdw7l>
- CNBC. (2026.4.27.). China blocks Meta's \$2 billion takeover of AI startup Manus. CNBC. <https://www.cnbc.com/2026/04/27/meta-manus-china-blocks-acquisition-ai-startup.html>
- O'Melveny & Myers. (2026.4.29.). China Unwinds Meta's Acquisition of Manus: Implications for Cross-Border AI Transactions. O'Melveny & Myers LLP.
- <https://www.omm.com/insights/alerts-publications/china-unwinds-meta-s-acquisition-of-manus-implications-for-cross-border-ai-transactions/>
- Jennings, J. (2026.2.27.). USMCA 2026 and Economic Security: The Convergence of Technology, Trade, and National Security.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영국]

- UK Cabinet Office. (2025.7.22.). National Security and Investment Act 2021: Annual Report 2024–25. His Majesty's Government.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national-security-and-investment-act-2021-annual-report-2024-25>
- UK Cabinet Office. (2026.3.12.). National Security and Investment Act (Notifiable Acquisition) (Specification of Qualifying Entities) Regulations 2021 · Consultation response. His Majesty's Government. <https://www.gov.uk/government/consultations/consultation-on-the-nsi-act-notifiable-acquisition-regulations/outcome/national-security-and-investment-act-notifiable-acquisition-specification-of-qualifying-entities-regulations-2021-consultation-response>
- UK Cabinet Office. (2022.11.16.). Newport Wafer Fab: Notice of Final Order under the National Security and Investment Act 2021. His Majesty's Government.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6375ef068fa8f5771111bd60/NWF_Final_Order_Public_Notice_16112022.pdf

[독일]

-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Klimaschutz [BMWK]. (2026.1.). Investment Screening in Germany: Facts and Figures 2025.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Klimaschutz. https://www.bundeswirtschaftsministerium.de/Redaktion/EN/Publikationen/Aussenwirtschaft/investment-screening-in-germany-facts-figures.pdf?__blob=publicationFile&v=1
- CNBC. (2022.2.1.). GlobalWafers' bid for Siltronic fails amid tech sovereignty concerns. CNBC. <https://www.cnbc.com/2022/02/01/globalwafers-bid-for-siltronic-fails-amid-tech-sovereignty-concerns-.html>
- CNN Business. (2022.11.25.). Nexperia and Elmos cases show how the US-China chip war is spilling over to Europe. CNN Business. <https://www.cnn.com/2022/11/25/tech/us-china-chip-war-spillover-europe-intl-hnk>
- Bloomberg. (2024.7.2.). Germany Blocks Sale of Gas Turbine Unit to State-Owned Chinese Shipbuilder. Bloomberg.
-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4-07-02/germany-blocks-man-s-sale-of-gas-turbine-unit-to-chinese-company>

[네덜란드]

- Bureau Toetsing Investerings [BTI]. (2025). Annual Report on Investment Screening 2024. Ministerie van Economische Zaken. <https://www.rvo.nl/onderwerpen/bti/jaarverslag>
- Ministerie van Economische Zaken. (2024.12.19.). Uitbreidingsvoorstel Wet veiligheidstoets investeringen, fusies en overnames (Vifo)[Expansion Proposal for the Vifo Act]. Ministerie van Economische Zaken.

[EU]

-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25.12.11.). Foreign Direct Investment: Council and Parliament Reach Political Agreement to Improve FDI Screening.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5/12/11/foreign-direct-investment/>
- European Commission. (2026.2.10.).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Screening of Foreign Direct Investments in the Union (Provisional Text). European Commission. <https://eur-lex.europa.eu/>

저자 소개

이재원 | jaewonlee@mofa.go.kr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선임전문관으로 재직 중이다. 관심 주제는 미중 경쟁, 기술 동맹, 경제제재와 수출통제이다. 주요 논문으로 “미중 경쟁 시기의 동맹 기반 반도체 수출통제.” 『국제지역연구』 33, no.3 (2024), “보장과 통제: 1987년 수출통제 양해각서로 본 한미동맹의 교환 메커니즘.” 『한국과국제정치』 37, no.3 (2021)이 있다.

(현안) 글로벌 권역별 화석에너지(원유·천연가스)의존 및 수급 현황

유아름 전문관

1. 개요

- 에너지는 국가 경제와 산업의 근간으로 수급 구조의 안정성은 경제안보의 핵심 기반이나, 2026년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화석에너지 특정 공급선에 대한 고의존의 취약성을 노정
- 전통 화석에너지(원유·천연가스 등)는 친환경에너지 전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 세계 1차 에너지 소비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동 보고서는 전통 화석에너지(원유, 천연가스)를 대상으로 ▲원료 에너지 수급 흐름과 ▲석유제품(정유) 수급 흐름을 분리 분석하여, 에너지안보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현황을 제공
 - ▶ (분석 권역) 북미, 중남미, 유럽, 러시아-중앙아시아, 중동-북아프리카, 서아프리카, 동아프리카-사하라 이남 내륙국, 남아시아, 동북아, 아세안, 오세아니아

2. 권역별 에너지 수급 구조 현황

< 원료 에너지(원유, 천연가스) 수급구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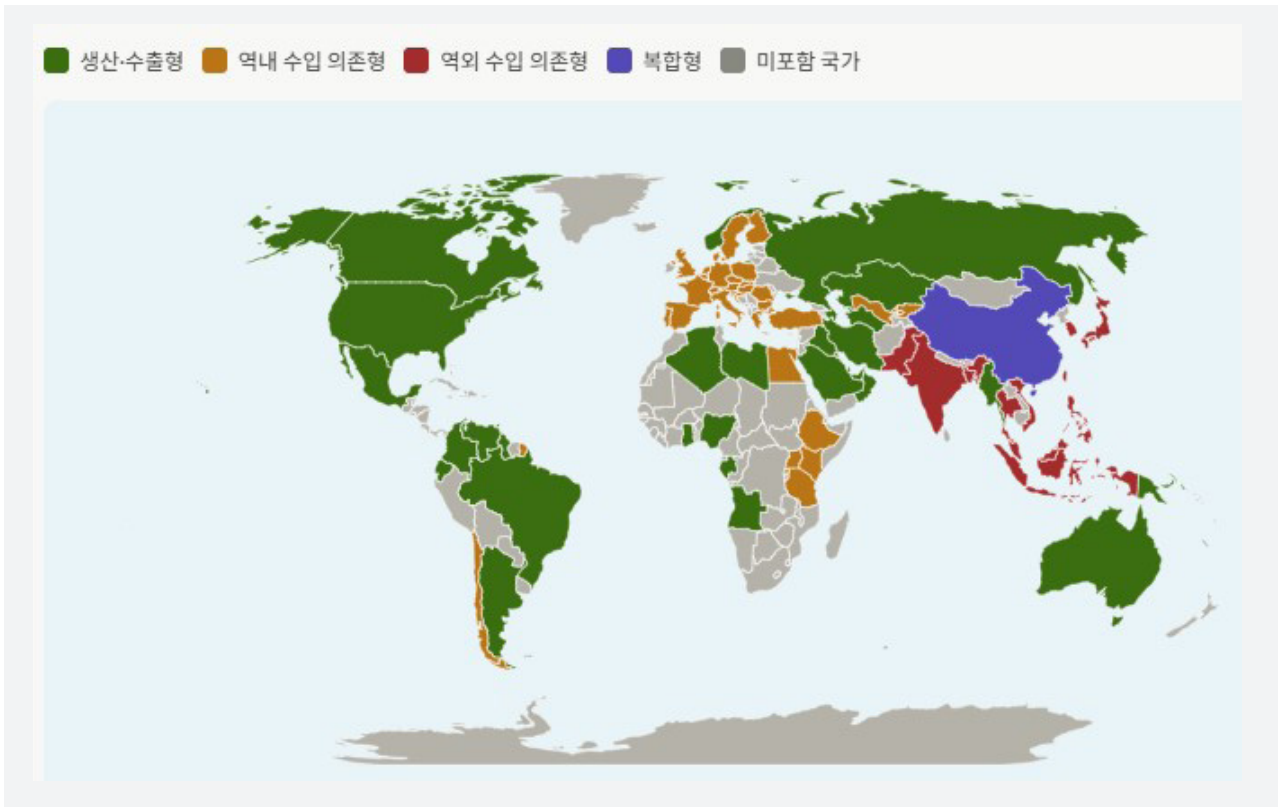
- 글로벌 화석에너지 수급 구조는 생산과 수출입 방향에 따라 4개 유형으로 구분
 - ▶ (생산·수출형) 내수를 초과하는 생산력을 보유, 특히 미국, 러시아 등은 에너지를 외교·통상 레버리지로 활용
 - 북미, 중동-북아프리카, 러시아, 중앙아시아 산유국(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서아프리카, 호주(LNG), 중남미 산유국*
 - * 브라질,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가이아나,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 ▶ (역내 의존형) 역내 파이프라인 또는 인접 산유국에 의존, 수입선 다변화 진행 중이며 특히 유럽은 러우 전쟁 이후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을 빠르게 탈피하여 미국·노르웨이·알제리 등으로 에너지 수급 다변화 중
 - 유럽*, 중남미 非산유국, 중앙아시아 非산유국
 - * (천연가스 수입 의존도) ▲(PNG) 노르웨이산 52% ▲(LNG) 미국산 55~58%

- ▶ **(역외 단일 의존형)** 화석에너지 전량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거나, 원거리 중동 등에서 에너지 수급 집중, 호르무즈 해협·말라카 해협 등 단일 해상경로에 취약해 에너지 공급 차질 시 동시 충격 구조
- 동북아(한·일·대만), 아세안 非산유국(필리핀, 태국 등), 남아시아(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동아프리카 및 사하라 이남 내륙 아프리카, 호주 및 파푸아뉴기니 제외 태도국 등
 - ▶ **(복합형)** 중국은 국내 생산(수요의 약 26%)과 함께 러시아·중동·중앙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등 5개 공급원을 동시 활용하는 유일한 다원화 구조 보유
- ※ (중국 원유 수입국 순위, 2025) ①러시아(17.4%), ②사우디(14%) ③이라크(11.2%) ④말레이시아(11.1%) ⑤브라질(8.2%)

[표 1] 권역별 화석에너지 수급 구조

권역	대표국	분류	주요 수입원	주요 수출대상	핵심 취약점
북미	미국, 캐나다, 멕시코	생산·수출형	역내 자급	한국, 일본, 유럽, 중남미 등	정책 변동성, 인프라 노후
중남미	브라질,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생산·수출형	브라질 등	미국, 중국, 유럽	인프라 부족, 정치 불안
유럽	EU, 영국, 노르웨이	역내 수입 의존형	노르웨이, 미국, 알제리 등	-	해외수입 의존
러시아·중앙아시아	러시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생산·수출형	역내 자급	중국, 유럽	대러 제재, 인프라 노후, 중국 편중
중동·북아프리카	사우디, 카타르, UAE	생산·수출형	역내 자급	한·중·일, 아세안, 인도·유럽	지정학 리스크 (호르무즈, 홍해 등)
서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앙골라, 가봉 등	생산·수출형	역내 자급	중국, 유럽	인프라 노후, 정제역량 부족
동아프리카·사하라 이남 내륙	르완다, 우간다, 에티오피아, 케냐 등	역외 수입 의존형	중동, 역내 아프리카 산유국	유럽, 아프리카 역내	인프라 부족
동북아	한국, 일본, 대만	역외 수입 의존형	중동, 미국, 호주 등	*정제품 수출	해외수입 의존
아세안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역외 수입 의존형, 생산·수출형 (말련, 브루나이)	중동,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동북아 등으로 수출	해외수입 의존, 지정학 리스크 (말라카 해협, 남중국해)
남아시아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역외 수입 의존형	중동, 러시아	-	높은 해외수입 의존도
오세아니아	호주 (LNG), 파푸아뉴기니	생산·수출형	*정제유는 동북아에서 수입	동북아, 아세안, 남아시아	정제 역량 부족
중국	중국	복합형	중동, 러시아, 중남미 등	*정제품 수출	제재 대상 원유 의존·美 2차제재 가능성, 말라카 해협 리스크

[그림 1] 권역별 화석에너지 수급 현황



*출처: [표 1]에 기반해 저자 작성

■ 글로벌 원료 에너지 흐름은 3개 핵심 축으로 집약되며, 이 3개 축의 안정성이 글로벌 에너지 질서에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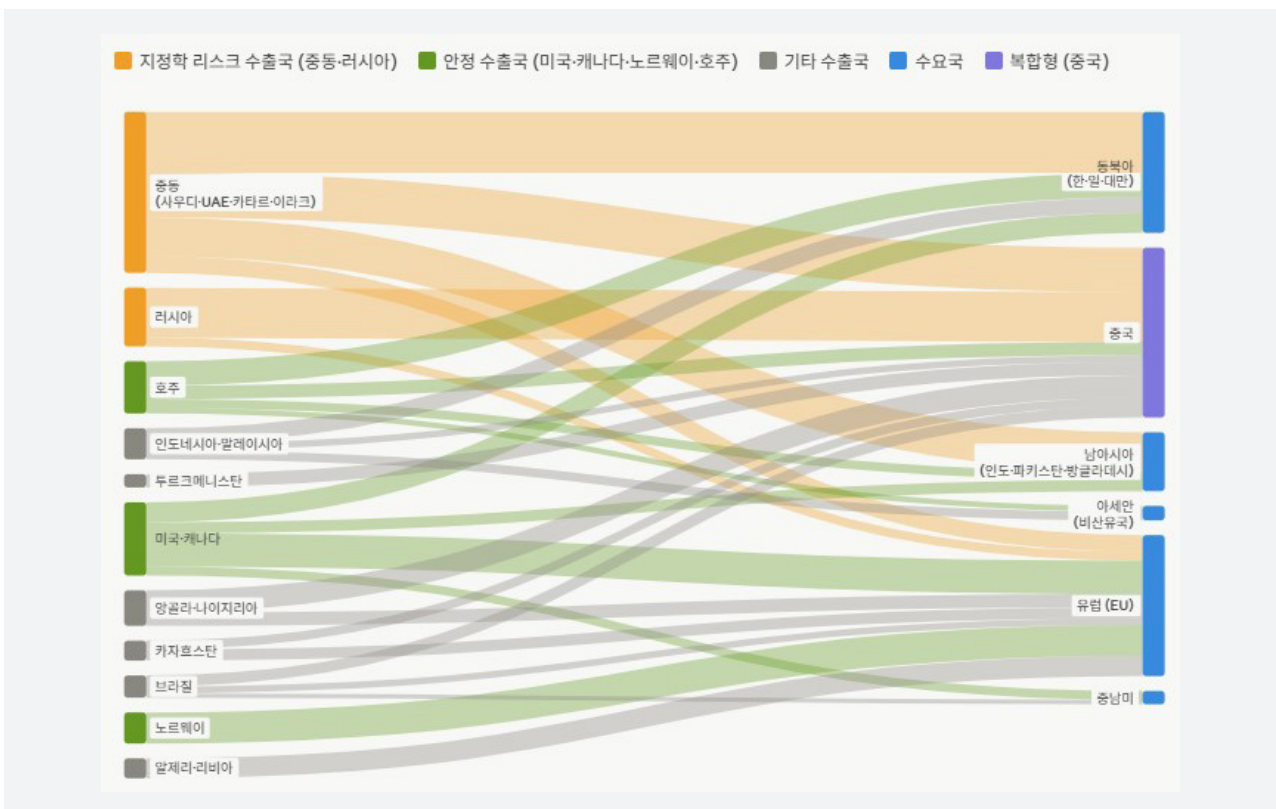
- ▶ (중동 → 아시아 해상루트) 호르무즈 해협, 말라카 해협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노출된 단일 경유로 집중되어 있어 병목 발생 시 동북아 국가, 아세안, 인도 등 대규모 수입국이 동시 충격을 받는 구조
- ▶ (러시아 → 중국 파이프라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강화되었으며, 유럽에서 이탈한 러시아 물량의 상당 부분이 중국으로 전환
- ▶ (미국·캐나다 → 유럽·아시아) 미국산 LNG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천연가스 공급 공백을 채우며 비중이 급증, 한국·일본 등 동북아 국가도 수입선 다변화 차원에서 미국산 및 캐나다산 원유 및 천연가스 수입 비중 확대 추세

[표 2] 주요 원료 에너지 수급 흐름 요약

공급 권역·국가	→ 수요권역·국가	주요 에너지원	수송방식
중동 (사우디, UAE, 카타르, 이라크 등)	동북아, 남아시아	원유, LNG	해상(호르무즈해협 경유)
미국	한, 일, 인도, 유럽	원유, LNG	해상
캐나다	미국, 한국, 일본	원유, 천연가스	파이프라인(美), 해상(아시아)

공급 권역·국가	→ 수요권역·국가	주요 에너지원	수송방식
러시아	중국	원유, 천연가스	파이프라인(Power of Siberia)
러시아	유럽 일부국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TurkStream 등)
노르웨이	유럽	원유, 천연가스	북해 파이프라인
알제리·리비아	유럽(이탈리아, 스페인)	원유, 천연가스	지중해 파이프라인
카자흐스탄	중국, 유럽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원유, 천연가스	파이프라인(CPC)
투르크메니스탄	중국	천연가스	파이프라인(CAGP)
브라질	중남미, 유럽, 중국	원유	해상
앙골라·나이지리아	중국, 유럽	원유	해상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동북아, 아세안	원유, LNG	해상(말라카해협 경유)
호주	동북아, 남아시아, 아세안	LNG	해상

[그림 2] 주요 원료 에너지 수급 흐름



*출처: 저자 작성 / 호르무즈 해협 봉쇄 및 대러제재 리스크가 있는 중동과 러시아는 지정학 리스크 수출국으로 분류

- 수급 흐름상 중국은 유일하게 5개 공급원(중동, 러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을 동시 활용하는 다원화 구조를 보유한 반면, 한국과 일본은 중동과 미국, 호주 3개 축에 편중

< 석유제품(정유) 수급 구조 >

■ 원료 에너지 흐름과 별개로, 정제능력의 권역별 격차가 또 다른 에너지 수급 구조를 형성, 원유 수출국이 석유제품 수입국이 되고 원유 수입국이 석유제품 수출국이 되는 역설적 구조가 관찰

- ▶ 정제능력은 단순 에너지 소비 문제가 아니라 산업 부가가치·에너지안보·외화 수입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역량

- 세계 정제능력은 중국, 미국, 러시아, 한국, 인도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이 글로벌 석유제품 공급의 핵심 허브로 기능*

* (세계 원유 정제능력 순위, 비중) ①중국(17.9%) ②미국(17.8%) ③러시아(6.6%) ④인도(4.9%) ⑤한국(3.2%)
(대한석유협회 통계, 2024년)

■ 정제능력 보유 여부에 따라 3개 유형으로 구분

- ▶ (유형 A: 원유 수입 + 정유 수출) 한국, 중국, 인도가 대표적이며, 원유 순수입국이나 세계 최고 수준의 정제능력으로 나프타·항공유·휘발유 등을 가공 후 역수출, 에너지 원료 수입국이면 서 동시에 석유제품 수출국

※ 인도는 대표적 정제 강국이나 대부분 내수용으로 소비 / 중국은 정유 순수입국이나 세계 정제 역량 1위로 유형 A로 분류 / 일본은 정제 역량 세계 7위이나 내수 수요 위축으로 정제 설비를 축소, 한국산 정유 등을 수입하는 것이 비용적으로 효율적이라 정유 순수입국으로 전환, 동 보고서에서는 일본을 정유 순수입국임에도 정제역량에 기반해 유형 A로 분류

- ▶ (유형 B: 원유 수출 + 정유 수입) 나이지리아, 앙골라, 모잠비크, 리비아, 수단, 미얀마, 멕시코, 호주 등 국가는 원유 수출국이나, 자국 내 정제시설 부족으로 휘발유·경유·항공유 등을 역수입, 에너지 수출로 외화를 벌지만 정유 수입에 외화를 재지출 하는 구조
- ▶ (유형 C: 원유 수출 + 정유 생산 및 수출) 미국, 러시아, 중국, 노르웨이, 캐나다, 중동 산유국은 원료 생산과 정제능력을 모두 보유, 원유 및 정유 전 주기 자국 내 처리,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가장 완결된 구조

[표 3] 주요국 석유정제능력 및 원유·정유 수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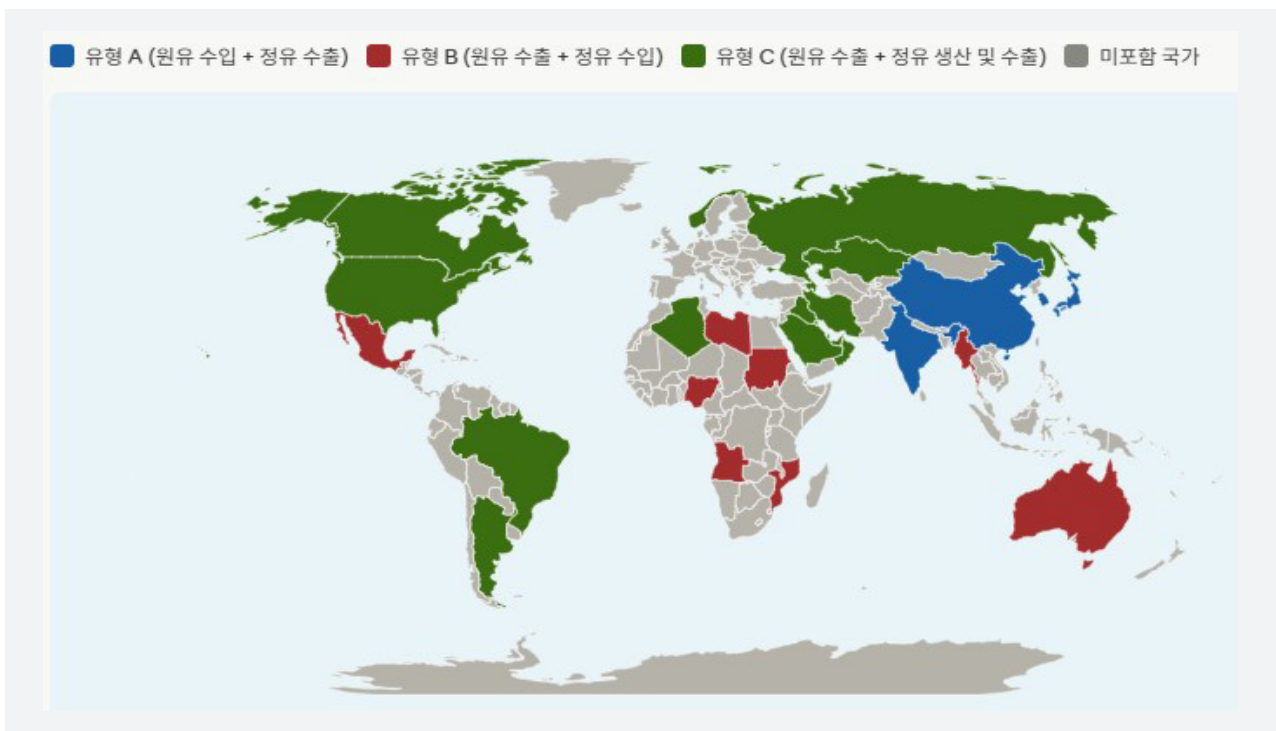
대표국	석유정제능력 (배럴/일)	원유 수급현황 (net crude oil imports/exports)	정유 수급현황 (net oil product imports/exports)	비고	유형
한국	약 336만	순수입국 (98.6%)	순수출국 (12.9%)	나프타, 항공유, 석유제품 수출 (아시아·미주), 인태지역 정유역량 3위 (1위 중국, 2위 인도)	A
일본	약 306만	순수입국 (100.1%)	순수입국 (26%)	정유 순수입국이나 정유역량 세계 7위, 인태지역 4위	A
미국	약 1,842만	순수입국 (13.6%)	순수출국 (22.4%)	정유 수출 (멕시코·중남미·유럽 등)	C
중국	약 1,848만	순수입국 (73.9%)	순수입국 (5.5%)	정유 순수입국이나 정유 역량 세계 1위	A

대표국	석유정제능력 (배럴/일)	원유 수급현황 (net crude oil imports/exports)	정유 수급현황 (net oil product imports/exports)	비고	유형
인도	약 508만	순수입국 (88.2%)	순수출국 (5.9%)	정유 내수 위주 + 일부 수출	A
러시아	약 678만	순수출국 (50.2%)	순수출국 (41.2%)	원유 + 정유 수출	C
나이지리아	약 52만	순수출국 (97.3%)	순수입국 (106.1%)	아프리카 원유 생산 2위이나, 정제역량 14위, 정유 수입 의존	B
호주	약 23만	순수출국 (29.2%)	순수입국 (94.3%)	정유 80% 이상 수입 의존	B
알제리	약 65만	순수출국 (34.3%)	순수출국 (66.6%)	아프리카 원유, 정유 생산 1위	C
카자흐스탄	약 40만	순수출국 (77%)	순수출국 (14.8%)	유라시아 원유 생산 2위, 정유 생산 2위	C
사우디 아라비아	약 328만	순수출국 (62.2%)	순수출국 (32.4%)	정유 수출 확대 추진	C
브라질	약 229만	순수출국 (40.3%)	순수입국 (12.4%)	정유 순수입국이나 정유역량 세계 10위, 중남미 1위	C

* 세계 석유정제능력 통계, 출처 (대한석유협회, 2023년 기준)

** 원유 및 정유 순수출국 및 순수입국 통계(2023년 기준, 2024년 기준 국가: 한국, 일본, 미국), 출처 (Energy Institute,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25」, IEA Country profile, 2025.5.12.검색)

[그림 3] 권역별 원료 수입 및 정제 역량 현황



*출처: [표 3]에 기반해 저자 작성

3. 권역별 에너지 구조 핵심 이슈

■ 생산·수출형 권역의 에너지 패권화

- ▶ 미국·중동·러시아는 자급을 넘어 수출 레버리지를 보유하며 글로벌 에너지 공급 질서를 장악
- ▶ 미국은 셰일혁명 이후 LNG·원유 최대 생산·수출국으로 부상, 에너지를 외교·통상 협상 카드로 적극 활용
- ▶ 중동은 세계 확인 원유 매장량의 48%를 보유하나 호르무즈 단일 출구 의존이라는 지정학적 역설 내재, 러시아는 대러 제재로 서방 시장이 차단되어 중국 의존 급속 심화

■ 역외 단일 의존형 권역의 구조적 취약성

- ▶ 한국·일본은 원료 에너지 자급률 0% 수준이나 세계적 정제능력으로 원료 수입 및 정제품 수출 구조를 형성, 에너지 취약성을 산업적 강점으로 부분 전환
- ▶ 유럽은 러우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산 의존 신속 탈피, 적극적 수입선 다변화 성공 선례 제시
- ▶ 아세안·남아시아 국가는 금번 중동전쟁으로 원료와 정제품 수급 모두 취약성을 노정 → 에너지 수급 다변화와 자국 정제 역량 확보 필요성 절감*

* 인도, 말레이시아 제외

■ 중국의 전 방위 자원외교와 에너지 지형 재편, 중동 산유국의 정제역량 강화

- ▶ 중국은 중앙아시아(파이프라인)·아프리카(차관-자원 패키지)·중남미(차관-자원 패키지, 지분 확보)·러시아(제재 물량 우회 환적, 파이프라인) 등 전 방위에서 에너지 수입 다변화 구조를 선제적으로 구축
- ▶ 세계 2위 정제능력으로 원료 및 정제품 전 주기 자급 구조 완성,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가장 완결된 구조를 보유
- ▶ 한편, 중동(사우디 아람코, UAE ANDOC) 및 정제 취약국의 정제 역량 강화는 장기적으로 한국 등 아시아 정제 허브의 경쟁 우위를 위협하는 변수로 부상

4. 평가 및 시사점

■ 정제 역량을 에너지 외교 레버리지로 활용

- ▶ 한국은 세계 5위 정제능력을 보유, 이를 에너지 외교 자산으로 활용 가능
- ▶ 나이지리아, 앙골라 등 정제 역량 부족 산유국에 정제 기술협력 등을 에너지 공급과 패키지로 연계하는 한국형 자원외교 모델 개발 필요

■ 다자 에너지 협력체 참여 강화

- ▶ Pax Silica 등 핵심광물 및 에너지 협력체를 에너지 수급 다변화와 연계
- ▶ 한·일·호주·싱가포르 또는 한·일·인도 등 에너지 수입국 간 공동 비축, 공동 구매 메커니즘 검토

[표 4] 한국의 에너지 협력 우선순위 권역

협력 시계	대상권역 국가	협력 방식	전략적 의미
단기·안정	호주·미국·캐나다	LNG 장기계약 확대, 스팟 여력 협의	안정적 중동 대체원 확보
중기 다변화	아프리카 (모잠비크 등)	신규 프로젝트 지분 참여	중국 기업 선점 전 조기 진입
중기 다변화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원유 도입 경로 개발 (CPC 활용 등)	중동 외 원유 수급선 확보
중기 다변화	중동 산유국 (사우디, UAE)	우회 인프라 협력, 비축공조	호르무즈 봉쇄 시 대응력 확보
장기전략	중남미(아르헨티나, 브라질)	신규 원유, LNG 파트너십	중동 외 수급선 확보
정제역량 활용	아프리카, 아세안, 중남미 산유국	정제 기술협력·합작투자, 인프라 지원	정제 허브 역할 확장 및 외교 레버리지화

참고문헌

- 배진영, 라병호(2025). 진짜 하루만에 이해하는 정유·석유화학 산업. TWIG.
- 오정석(2025). 강대국은 어떻게 미래를 확보하는가: 한눈에 보는 원자재 패권지도. 한빛비즈.
- 하라타 다케오 (2024). 세계에너지 전쟁 지도. 지식노마드.
- 강영진 (2026.3.10.). “중동 에너지 의존 큰 아시아 각국, 필사적 대응”. 뉴시스.
- 김윤정, 임유진 (2023.8.28.).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주요국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윤희 (2026.4.10.). “미-이란 전쟁과 원유 수급 불안_아프리카는 대안이 될 수 있는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슈브리프 832호.
- 전형근 (2026.3.26.). “호주 주요소 600곳 품절 대란...한국 수출 제한에 오일쇼크 공포”. 글로벌이코노믹.
- 정귀희 (2026.4.20.). “중동전쟁으로 드러난 화석연료의 취약성과 장단기 영향”.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6(7).
- Jason Bordoff, and Erica Downs (2026.3.6.). “How the Iran war could consolidate China’s energy Dominance”. Foreign Policy.
- Leahy, Joe., Malcolm Moore(2026.1.8.). “Donald Trump’s Venezuela action raises threat for China’s oil supplies”. Financial Times.
- Romain Debarre et al. (2025).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KPMG & Kearney.
- IEA (2025. Nov.). “World energy outlook 2025”. International Energy Agency.

[웹사이트]

- EIA 에너지통계 (<https://eia.gov/>).
- IEA country profile (<https://iea.org/>).
- 대한석유협회 통계 (<https://petroleum.or.kr/>).
- 한국석유공사 통계(https://petronet.co.kr).
- 관세청 수출입통계 웹사이트(https://tradedata.go.kr).

저자 소개

유아름 | aryoo22@mofa.go.kr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전문관으로 재직 중이다. 관심 주제는 첨단기술패권 경쟁, 디지털·AI 규범, 디지털 통상, 빅데이터 분석, 에너지, 중동 정치경제이다. 주요 연구로는 『클라우드 산업과 경제안보: 데이터안보와 기술통제』 경제안보리뷰 24-16호(2024), 『글로벌 LNG 동량과 미국의 LNG 정책』 경제안보리뷰 25-7호(2025), 『피지컬 AI 공급망 분석과 경제안보적 함의』 경제안보리뷰 25-23호(2025) 등이 있다.

EWS 공급망/에너지 관련 모니터링 결과

(기간: 2026.4.22.~2026.5.6.)

※ 외교부는 핵심품목들의 글로벌 공급망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 EWS)을 운영 중이며 경제안보외교센터에서 별도 취합한 경제안보 관련 해외 동향을 종합하여 주요 동향 및 표로 정리

■ 미국·EU, 핵심광물 전략적 파트너십 MOU 체결 및 핵심광물 행동계획 발표

- ▶ (주요 내용) 루비오 美 국무장관-셰프코비치 EU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 美-EU 핵심광물 전략적 파트너십 MOU 서명 / 그리어 USTR 대표-셰프코비치 집행위원, 별도의 핵심광물 공급망 복원력 강화 행동계획 발표(4.24.)
 - (MOU) 탐사·채굴·가공·정제·재활용 등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협력 포괄* / 비구속적 성격이나 최소 연 2회 정례 회의 개최 및 후속 이행 점검 예정
 - * 제3국 수출 제한 관련 정보 공유, 비축 협력, 지질지도 작성, 허가 절차 간소화, 자산 매각 심사 공조 등
 - (행동계획) 국경 조정 최저 가격, 표준 기반 시장, 가격 격차 보조금, 장기 구매계약 등 무역정책 공조 / 채굴·가공·재활용 공통 표준 개발, 공급 차질 신속 대응 메커니즘 구축
- ▶ (평가) 중국 의존을 축소하기 위한 서방 동맹의 다자간 협력 틀이 구체화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되나, 구체적인 실행 메커니즘이 미완성인 점은 한계
 - 동 합의는 중동전쟁 속 美-EU 긴장 고조 상황에서 성사된 긍정적 협력으로 핵심광물 대중국 의존도 축소에 대한 양측의 의지를 보여주는 움직임으로 해석

출처 : Bloomberg(4.25), WSJ(4.24), 연합뉴스(4.25), Reuters(4.25) 등

■ UAE, OPEC·OPEC+ 전격 탈퇴 결정 — 독자적 증산 노선 선언

- ▶ (주요 내용) UAE, 사우디 주도의 감산 기조와 생산 쿼터 제약에 따른 갈등 속 장기 에너지 수요 대응 및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26.5.1일부 OPEC·OPEC+ 체제 탈퇴 결정
 - UAE는 세계 3위의 산유국으로 일일 생산능력이 485만 배럴에 도달했으나, OPEC 쿼터(340만 배럴)에 묶여 연간 약 200억~300억 달러의 기회 손실 발생 / 사우디 주도 감산 기조 및 생산 정책을 둘러싼 이견 지속적 제기
 - * ADNOC(아부다비국립석유공사)는 2027년까지 하루 500만 배럴 달성을 목표로 지난 10년간 상류 부문에만 1,500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해당 목표가 올해 초 조기 달성된 것으로 평가
 - UAE 에너지부 장관, 생산 수준과 관련된 정책을 신중히 검토한 끝에 내린 결정으로 사우디 포함 어떠한 나라와도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표명
- ▶ (평가) 산유국 협력 체제의 균열이 현실화됐다는 평가와 함께, 단기 유가 하락에 대한 기대와 중장기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우려 공존

- UAE의 증산이 현실화될 경우 수급 개선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과 단기 수급 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신중론 병존 / 향후 OPEC의 구조적 약화에 따른 석유 시장의 변동성 확대 우려 공존

출처 : FT(4.29), BBC(4.29), 글로벌이코노믹(4.29), 조선일보(4.29), 동아일보(4.29) 등

■ 미국, EU산 자동차 관세 15%→25% 인상 발표, 톰베리 협정 이행 갈등

- ▶ (주요 내용) 트럼프 대통령, EU가 지난해 7월 체결한 美-EU 무역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EU산 자동차·트럭 관세를 15%→25%로 인상하겠다고 트루스소셜에 발표(5.1)
 - 트럼프 대통령,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EU산 자동차·트럭 관세 이행 방침 확인
 - * 232조는 지난 2월 대법원이 일부 관세를 뒤집은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아 행정부가 재량권 보유
 - 유럽 의회, 3월 관세 인하 관련 법안 통과시켰으나 회원국·집행위 최종협상 절차가 남아 이행 속도 지연 중 / 유럽의회 무역위원장, 성명을 통해 금번 관세 위협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
- ▶ (평가) 미국의 관세인상 위협은 중동전쟁을 둘러싼 美-EU의 외교 갈등이 경제 전선으로 확대되는 패턴의 반복으로, EU 역내외에서 사태 추이를 둘러싼 긴장 고조
 - 무역합의 지연에 대한 미국의 불만이 중동전쟁 대응 관련 미국과 유럽국가들의 입장 차이와 맞물려 제기된 것으로 해석
 - 한국 등 동맹국들 역시 유사한 통상 압박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경계 중

출처 : Politico(5.1-5.3), 경향신문(5.3), 동아일보(5.4) 등

■ 트럼프 행정부, AI 모델 사전 검토 체계 고려 중 - 비개입 기조 수정 가능성 부상

- ▶ (주요 내용) 미 행정부, 신규 AI 모델 공개 전 정부 검토 절차를 도입하는 행정명령과 민간이 정부의 AI 활용에 간섭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라는 복수 외신 보도
 - ※ ① AI 실무그룹 신설 행정명령(테크기업 임원, 정부 관리로 구성해 정부 검토 절차 등 감독 방안 검토) ② 민간의 정부 AI 모델 활용 간섭을 금지하고 연방정부 계약 기준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으로 알려짐
- 보도 확산 이후 백악관은 관련 논의를 공식적으로 '추측'이라고 부인 / 언론들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논의가 '아직 유동적'이라고 보도 중
- ▶ (평가) 美 행정부의 AI 사전 검토 체계는 '정부가 AI 모델에 우선 접근권을 갖되 공개 자체를 막지는 않는' 방향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AI 규제를 최소화해온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와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주목
 - 엔트로픽의 미토스(Mythos) 발표가 직접적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되며, 엔트로픽-국방부 갈등도 주요한 배경으로 지목 중
 - * 엔트로픽이 군의 AI 기반 미국인 감시·자율무기 구동을 허용하지 않자,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26.3월)
 - AI 위험성 우려 확대, 여야 공통의 규제 필요성 공감대도 복합적 배경으로 제시되며 정책 전환 압력은 이미 다층적으로 누적돼 있었다는 분석

출처 : NYT(5.4), CNBC(5.5), Politico(5.5), Forbes(5.5) 등

■ EWS 공급망

국가	일자	내용
중국	4.23.	[무역] 중국 내 29개 성, 1분기 지역별 대외무역 통계 발표
	4.24.	[수출통제] 상무부, 7개 EU 기업·기관*을 수출통제 목록에 등재 *▲(벨기에 2개 기업) FN Herstal(방산), FN Browning(FN Herstal 모기업) ▲(체코 2개 기업 및 1개 연구기관) OMNIPOL(방산), EXCALIBUR ARMY(방산), SPACEKNOW(항공우주), VZLU AEROSPACE(국가항공연구/개발센터) ▲(독일 1개 기업) HENSOLDT AG(센서 및 항공기)
	4.26.	[산업] 상무부, EU 산업가속화법안에 대한 공식 의견 제출
	4.27.	[투자] 상무부, 1분기 외자 유치 통계 발표 : 신규 외자기업 설립 수 전년 동기대비 11% 증가, 외자 유치액(실 사용액 기준)은 7.3% 감소
	4.27.	[AI] 발개위 산하 외국인투자안전심사작업판공실,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中 AI 기업 Manus 프로젝트에 대한 美 Meta社의 투자 조치를 취소할 것을 요구 * 외상투자법 및 국가안전법 등에 근거한 외국인투자안보심사방법(21.1월 시행) 등
	4.29.	[디지털] 제9회 디지털 차이나 서밋에서 ‘디지털 중국 발전 보고(2025년)’ 발표
	4.30.	[광물] 자연자원부, 중국은 14종 광물의 매장량과 17종 광물의 생산량에서 세계 1위 차지
	5.5.	[희토류] 산업정보화부, ‘희토류 관리조례’에 따른 행정처벌사항 재량권 기준표 의견수렴안 발표 및 의견 수렴(~5.28)
	5.5.	[제재] 상무부, 미국의 이란산 석유 거래 관련 5개 中 기업 대상 제재 조치의 인정·집행·준수를 금지한다고 발표 : 최초의 금지령을 통해 美 제재의 역외관할 적용을 부정
미국	4.17.	[항만] 美 중서부 내륙 항만 운영기관과 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구조로서 교육·인력·산업을 통합한 장기적 플랫폼 ‘콘 벨트 내륙 항만 컨소시엄’ 출범
	4.17.	[투자] Lutnick 상무장관, 중국 자동차 기업 대미투자 불허 의사 표명(Bloomberg)
	4.17.	[관세] 국제무역위원회, 세계관세기구(WCO)의 HS 2028 개정 권고안 수용 및 관세율표(HTSUS) 개정안 공고
	4.20.	[무역협상] 美-멕시코, 미-멕시코 협정(USMCA) 재검토 첫 공식 협상 5.25. 주 개최 합의(Inside US Trade)
	4.20.	[식량] 하원, 쌀 분야 301조 조사 촉구(Inside US Trade)
	4.20.	[핵심광물] 수출입은행, 핵심광물 비축 프로젝트 ‘Project Vault’ 운영 가시화(Reuters)
	4.20.	[무역] 국제무역위원회, 중국 항구적 무역관계 지위 박탈 영향 조사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제출 완료(Inside US Trade)
	4.22.	[무역정책] 하원 세입위원회, ‘트럼프 행정부의 2026년 무역정책 아젠다에 관한 전원위원회 청문회’ 개최
	4.22.	[반도체] 하원 외무위원회, 對中 반도체 수출통제 법안 등 22개 법안 승인(Politico)
	4.22.	[핵심광물] Greer USTR 대표, 중국산 핵심광물 의존 탈피 위해 동맹국의 안보 프리미엄 부담 필요 언급(FT)
	4.22.	[조선] 조선업 부흥을 위한 ‘SHIPS for America Act’ 입법 추진 연합 출범(Inside US Trade)
4.23.	[관세] 상무부, 캐나다·멕시코 철강·알루미늄 對美 신규 생산투자 연계 관세 조정 신청 절차 공고	

국가	일자	내용
미국	4.23.	[의약품] 美 법무부·마약단속국, 의료용 대마 함유 제품에 대한 연방 마약류 규제법에 따른 규제물질 등급 재분류 명령 발표
	4.23.	[주류] Greer USTR 대표, 캐나다 주류 수입 제한 관련 집행조치 가능성 경고(Inside US Trade)
	4.24.	[핵심광물] USTR, '핵심광물 공급망 복원력 강화를 위한 美-EU 공동 액션 플랜' 발표
	4.24.	[항만] Trump 대통령, 미국 내 항만 간 운송에 외국적 선박 투입을 허용하는 '존스법 유예 (Jones Act waiver)' 조치 90일 연장 승인
	4.24.	[제재] 재무부, 이란 원유 수입 중국 정유사 및 그림자 선단 제재
	4.28.	[관세] 관세국경보호청(CBP), IEEPA 환급 시스템(CAPE)의 정식 개통(4.20) 이후 4.26 오후 8시까지의 처리 현황을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출
	4.29.	[관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알루미늄·철강·구리 관련 미국 관세율표(HTSUS) 기술적 정정 2건 및 해석명확화 1건 발표
	4.29.	[강제노동] USTR, 강제노동 301조 조사 관련 공청회 개최(4.28-4.29)
	4.30.	[관세] 상무부 국제무역청(ITA), 중국·한국·대만·베트남산 PTMEG (폴리테트라메틸렌에테르 글리콜)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발표
	4.30.	[식량] 하원, '2026 농업, 식품 및 국가안보법(H.R.7567)' 통과
	4.30.	[조선] 하원 외무위 Young Kim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장(공화/캘리포니아/3선), '조선 분야 교류·훈련을 통한 리더십 및 전문성 촉진 법안' 대표 발의 ※ Mike Lawler 하원의원, Aumua Amate Coleman Radewagen 대의원 공동발의 참여
	4.30.	[지식재산권] USTR, 매년 전 세계 100여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상태를 검토하는 '2026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 발표 : 한국,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 및 감시 대상국(Watch List) 미포함
	5.1.	[관세] Trump 대통령, EU산 자동차 및 트럭에 대해 관세 25% 상향 발표
	5.5.	[전자기기] 연방통신위원회(FCC), 미국 시험 기관을 인정해주지 않는 국가의 전자기기 시험·인증 기관을 인정하지 않는 규칙 제정 착수 의결
	5.2.	[조선] 상무부 국제무역청(ITA), 미-일 조선협력에 관한 양해협서에 기반하여 日 조선업계 대표단과 美 앨라배마, 플로리다, 미시시피 방문(4.26-5.2)
일본	4.12.	[희토류] 중국의 3월 對日 희토류 수출 전년대비 27.2% 감소(닛케이)
	4.18.	[AI] 문부과학성, AI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사업 공모 시작 : 1건당 최대 500만엔 지원, 총 약 1,000건 채택 예정(닛케이)
	4.18.	[반도체] 경산성, 소니그룹이 구마모토 현에 건설 중인 이미지센서 공장에 최대 600억엔 보조금 지원 결정(닛케이)
	4.19.	[조선] 가와사키중공업(KHI), AI 기반 자율 이동 조선 로봇 개발 발표 : 2028년 상용화 목표(닛케이)
	4.20.	[경제안보] 日-英 제10회 외교장관 전략대화 :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및 회복력 제고를 핵심 협력 분야로 확인
	4.21.	[양자] 이화학연구소, 144큐비트 기반 국산 양자컴퓨터 '에이투(A2)' 운용 시작(닛케이)
	4.21.	[경제안보] 日-멕시코 정상 전화회담 개최 : 다카이치 총리, 양국 간 경제안보 대화 프레임 구축 제안 및 무역 관계 강화 노력 등 합의
	4.21.	[핵심광물] 정부, 핵심광물 및 플라스틱 재활용 강화를 위해 2030년까지 약 1조엔 규모의 민관투자 추진(닛케이)
4.21.	[AI] 日-인도 제1회 AI 전략대화 개최 : AI 기술 및 거버넌스 협력 확대 합의	

국가	일자	내용
일본	4.23.	[에틸렌] 석유화학공업협회, 3월 에틸렌 설비 가동률 68.6%로 1996년 이후 최저치 기록(닛케이)
	4.24.	[우주] 日-EU 우주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민관 워크숍 개최(브뤼셀)
	4.24.	[대미투자] 日 3대 메가 은행,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관련 대출 방침 확정 * ▲오하이오 가스화력 발전소 ▲텍사스 원유 선적항 ▲조지아 인공다이아몬드 제조시설
	5.1.	[자동차] 차량용 알루미늄, 차량 부품용 플라스틱 제품 가격 상승 등으로, 자동차 가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존재(닛케이)
	5.5.	[정상회담] 다카이치 총리, 호주 방문(5.3-5.5) : 일본-호주 정상회담 및 '경제안보 보장 협력에 관한 일본-호주 공동선언' 발표 등
EU	4.16.	[디지털] 집행위, 구글의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조사와 관련하여 예비조사 결과 발표 : 구글이 검색 엔진 데이터를 타사와 공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 포함
	4.24.	[핵심광물] EU-美 핵심광물 전략적 파트너십 출범(워싱턴DC)
	4.28.	[규제] 집행위, '더 단순하고 명확하며 잘 시행되는 EU 규정집(A Simpler, Clearer and Better Enforced EU Rulebook)'을 통해 EU 규제 개선 계획 발표
	5.1.	[관세] 집행위, 美 Trump 대통령의 EU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언급에 대해 대변인 명의의 對언론 공식 입장문 발표
	5.5.	[관세] 집행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의 對EU 관세 부과 발언에 대해 "합의는 합의"라며 미국이 무역합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 표명
대만	4.22.	[반도체] TSMC, A13-A12 차세대공정 및 첨단 패키징 로드맵 공개
	4.27.	[반도체] 지식재산법원, TSMC 14나노 이하 공정 관련 핵심기술 유출 전직 엔지니어 4명에 국가안전법 등을 적용해 최대 10년형 선고
	4.27.	[양자] 경제부, 양자산업기술사무소 설립 : 기존 '실리콘 섬'을 '양자 섬'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 제시
	4.30.	[경제] 대만경제연구원·중화경제연구원, AI 수요 확대와 1분기 수출 호조를 반영해 2026년 대만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7.56%, 7.22%로 상향 조정
	5.6.	[대미투자] SelectUSA, 투자정상회의 참석 계기 대미투자 및 공급망 협력 확대 방안 논의 예정(메릴랜드주, 5.3-5.6)
영국	4.23.	[관세] 무역구제청, 한국산 후판 반덤핑 조사 관련 주요사실서 발표
캐나다	4.21.	[한캐협력] 한화그룹-앨버타주 간 포괄적 MOU 체결 : 방산, 에너지·천연자원, 물류·공급망 등 3대 협력분야 중심 협력 기회 모색
	4.28.	[경제안보] 재무부, '봄 경제 업데이트(Spring Economic Update)' 발표 및 2025년 예산안의 핵심 기조인 '경제안보·무역다변화'를 유지하며 생산성·성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 방향 제시
호주	4.20.	[관세] 반덤핑위원회, 한국산 구조강관 신속재검토 조사 종료 발표
	4.22.	[핵심광물] 호주 전략정책연구소(ASPI), 핵심광물 관련 대화체인 '제3차 다윈 대화' 개최(4.21-4.22) * 지속가능한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방안 모색을 위해 2023년 ASPI 주도로 창설된 1.5트랙 협의체로 호주, 한국, 일본, 미국 등 주요 파트너국 정부 및 산업계 관계자 참여
	4.24.	[배터리] 산업과학장관·기후변화에너지장관, 재생에너지청을 통해 호주 배터리기업 2개사에 총 430만 호불 지원 발표

국가	일자	내용
호주	4.24.	[드론] 내무부, 드론 보안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협의 문서 공개 및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개시(~5.25)
	4.28.	[플랫폼] 정부,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호주 언론사와 콘텐츠 사용료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호주 내 매출의 2.25%를 부담금으로 강제 부과하는 '뉴스 미디어 협상 법안' 공개
	5.4.	[정상회담] 호주-일본 정상회담 및 공동선언 발표 : ▲경제안보 협력 공동선언 ▲핵심광물 협력 공동성명 ▲에너지 안보 공동성명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등
스위스	4.28.	[정상회담] 스위스-세르비아 정상회담 개최 : 신제품/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가속화하고 산학 협력 강화를 위한 혁신 프로그램 협정 체결
멕시코	4.20.	[USMCA] 美 Greer USTR 대표 및 협상팀, 멕시코 방문 및 USMCA 재검토 제2차 협의 진행
	4.21.	[멕-EU 관계] 외교장관, 멕시코-EU 현대화된 글로벌 협정 세부사항 조율을 위해 벨기에 방문 (4.20-4.21)
	4.23.	[메탄올] 美 Transition Industries社, 멕시코 프로젝트* 착공식 개최 * 메탄올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로 美 Transition Industries(발주처), 삼성엔지니어링(플랜트 건설), 이탈리아 Techint(유틸리티 건설) 등 다국적 기업 참여
	4.24.	[멕-캐 관계] 멕시코-캐나다 정상 간 통화 : 양국간 액션플랜 이행 점검 및 USMCA 관련 협의 등을 논의
베트남	5.3.	[정상회담] 日 다카이치 총리 베트남 방문(5.1-5.3) : 일본-베트남 총리 회담 등 양국 경제·에너지 안보 협력 강화 추진
	5.7.	[베-인 관계] 또 럽 총서기 겸 국가주석, 인도 방문(5.5-5.7) : 정치적 신뢰 강화 및 무역·투자·에너지·디지털 기술 등 협력 확대 예정
싱가포르	5.5.	[정상회의] 뉴질랜드 러슨 총리 싱가포르 방문(5.3-5.5) : 제1차 양국 연례 정상 회의 개최
인도	4.22.	[철강] 인도 JSW스틸社-일본 JFE스틸社, 인도 오디샤주에 철강 합작사 체결(The Hindu)
	4.22.	[탄소] 아마존, 인도 쌀 농가 기반 탄소배출권 확보 위해 3,000만 달러 규모 계약 체결(The Economic Times)
	4.23.	[FTA] 상공부 장관, 인도-한국 FTA 재협상 2027년 중반 타결 목표라 언급(Business Standard)
	4.29.	[자동차] 도로운송고속도로부, 중앙자동차규칙 개정을 통해 차량 연료로 최대 100% 에탄올 사용 허용 제도 정비 추진(Business Line)
	4.29.	[희토류] 인도 안드라프라데시주, 희토류 산업 육성을 위해 향후 10년간 5,000억 루피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는 희토류 회랑 구축 추진(Business Line)
	5.1.	[투자] 재무부, 외환관리법 下 FDI 규제 완화 고시 : 외국 기업 내 중국(또는 홍콩) 지분이 10% 이하일 경우 정부 승인 없이 인도 투자 가능하도록 절차 간소화
태국	4.27.	[관세] 상무부, 한국산 및 중국산 도금강판 반덤핑 조치 상황 변경에 따른 검토 절차에 따라 현장조사 실시 예정(5월 중)
	4.29.	[투자] 두산전자, 태국에 인쇄회로기판(PCB) 핵심 소재인 동박 적층판(CCL) 생산공장 신규 건립 계획 공식 발표

국가	일자	내용
남아프리카 공화국	4.28.	[관세] 中 국무원 관세세척위원회,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었으나 최빈국으로 분류되지 않은 아프리카 20개국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26.5.1~'28.4.30) 조치 발표
콩고 민주공화국	4.20.	[양자협력] 콩고-잠비아, 국경 인프라 현대화 및 양자 상업협력 강화 합의 체결
	4.27.	[광물] 광산감독청(IGM), 광물 가드(Garde Miniere) 창설 공식 발표

■ 에너지

국가	일자	내용
중국	4.22.	[에너지] 중공중앙·국무원 판공청, 에너지 절약 및 탄소 감축 의견 발표
	4.22.	[에너지] 국무원, 리창 총리 주재 '에너지 안보와 녹색·저탄소 전환의 통합적 추진 및 신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 가속화' 주제 학습 진행
미국	4.22.	[원자력] 에너지부, 원자력 에너지국 및 환경관리국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2건의 신청공고* 발표 * (원자력에너지국) 민간 주도 미국 내 핵연료 전주기 역량 구축 추진, (환경관리국) 아이다호 부지 국방 관련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 실증 및 환경관리 임무 수행을 추진할 민간기업 모집
	4.23.	[원자력] 원자력 스타트업 Oklo社, Nvidia社와 협력 下 잉여 플루토늄 활용 핵연료 연구개발 박차(Barron's)
	4.23.	[원자력] TerraPower·Kairos Power社, 미국 내 상업용 원전 건설 착공(WSJ)
	4.27.	[에너지] 내무부, 해상풍력 개발 구역 임대권 종료 및 석유·LNG 투자 전환 합의 체결 발표
일본	4.21.	[에너지] 日-카타르 정상 전화회담 : LNG를 비롯한 에너지 분야 등의 협력 강화 논의
	4.22.	[에너지] 日-뉴질랜드 정상 전화회담 : 아태지역 에너지 정세를 감안한 에너지 및 중요물자의 안정적 공급의 중요성 확인
	4.22.	[에너지] 일본 국책 에너지 개발 기업 석유자원개발(JAPEX), 국내외 원유·천연가스 생산량을 10년내 4배로 확대하는 중기 계획 발표
	4.22.	[청정에너지] ASEAN 국가와의 청정에너지 협력을 위한 CEFA(Cleaner Energy Future Initiative for ASEAN) 민관 포럼 온라인 개최
	4.23.	[에너지] 日-사우디 정상 전화회담 : 일본에 대한 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한 협력 요청
	4.24.	[원유] 멕시코 대통령, 日 정부 요청에 따라 일정 기간 내 원유 100만 배럴을 공급하기로 합의 :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르면 7월 일본 도착 가능성(교도통신)
	4.28.	[원유] 日 이데미츠 흥산社, 호르무즈 해협 우회 조달 원유 약 400만 배럴을 베트남 공급 예정 (닛케이)
	5.3.	[원유] 일본 기업이 러시아 사할린-2 생산 원유를 일본에 조달했다고 보도(요미우리)
EU	4.22.	[에너지] 집행위, 에너지 위기로부터 유럽시민들을 보호하고 청정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EU 에너지 긴급조치(Accelerate EU) 발표
대만	4.30.	[석탄] 대만전력, 중동사태 대응 마이랴오 석칸화력 1, 3호기 재가동 : 동 발전기 5~7월 전력 공급 지원 예정

	일자	내용
호주	4.24.	[경유] 기후변화에너지장관·통상장관, 경유 1억리터 추가 확보 발표
	4.24.	[연료] 연료 안보 관련 호주-뉴질랜드 재무장관 회담 개최
	4.26.	[비축유] 기후변화에너지장관, 호주 내 비축유 재고 ▲휘발유 44일분 ▲경유 33일분 ▲항공유 30일분이라 발표
	5.1.	[연료] Albanese 총리, 항공유 1억 리터, 경유 5년만 리터 추가 확보 발표
네덜란드	4.22.	[에너지] 정부, 약 10억 규모의 에너지 지원 패키지 발표(4.20) 및 하원 토론에서 전반적 지지 확보
독일	4.24.	[유류] 연방의회, 5.1부터 6월 말까지 디젤 및 휘발류에 대한 세금을 리터당 17센트 인하하는 법안 가결
	4.24.	[에너지] 메르츠 총리,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국가안보회의의 소집 예정
	4.24.	[원유] 러시아, 독일 슈베트 정유소 카자흐스탄산 원유 수송 5.1부터 중단 예고(Tagesspiegel)
	4.30.	[항공유] 독일 항공업계, 항공유 부족 우려 : 업계·전문가들, 5월 중 항공기 운항 축소 불가피 전망
스웨덴	4.28.	[항공유] 총리·부총리 겸 에너지기업부 장관·에너지청 청장, 중동전쟁 상황에 따른 항공유 부족에 대한 조기 경보 발령
핀란드	4.23.	[원자력] 국방부, 현행 원자력법상 핵장치 금지 조항을 폐지하고, 현행 형법상 핵장치 처벌 규정에 대한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회 제출
칠레	4.16.	[전력] 국가전력조정위원회, 송전망 사업 입찰 참여 절차 간소와 방안 발표
베트남	4.22.	[원자력] 국영 에너지 산업 공사(PVN)-한국전력공사, 원자력 발전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4.23.	[원자력] 국영 에너지 산업 공사(PVN), 국제 원자력 기구(IAEA)와 협력하여 원자력 발전 프로젝트 준비 추진
	4.23.	[에너지] 국영 에너지 산업 공사(PVN)이사회 의장, 한국-베트남 전략적 에너지 협력 강화를 위한 3대 핵심축* 제안 * ▲원자력, LNG 발전, 해상 풍력 등 전략 에너지 개발 분야 협력 추진 ▲설비 제조, 운영·유지 보수 및 단계적 현지화 등을 포함한 가치사슬 및 산업 생태계 협력 추진 ▲과학기술 촉진 및 전문가 교류 확대를 통한 핵심 기술 이전과 인력 양성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 추진
	5.4.	[에너지] 산업무역부 장관, 석유 및 전력 공급 안정 확보 발표
	5.4.	[LNG] 퀴람 LNG 프로젝트로 응에안성이 FDI 유치 전국 2위 기록 / 반면, 응이선 LNG 프로젝트는 투자자 확보 실패로 3번째 입찰 종료
인도	4.23.	[항공유] 정부, 항공유 규정을 개정해 합성 탄화수소(에탄올 등)와 기존 항공유 혼합을 공식 허용(Business Standard)
	5.2.	[LPG] 인도행 LPG 운반선, 2주만에 호르무즈 해협 통과(The Times of India)
인도네시아	4.30.	[LPG] 정부, 석유화학 업계의 납사 대체 원료로 사용되는 LPG 수입 관세를 기존 5%에서 0%로 인하
	4.30.	[대체 연료] 정부, 연간 약 700만톤의 LPG 수입 축소 및 석탄 가스화 기반의 디메틸에테르(DME) 생산 추진 중

「경제안보 Review」 2026년 발간 목록

발간호 (발간일)	구분	제목	저자명
26-1호 (2026.1.9)	분석	2025 미국 국가안보전략서 분석: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이재원
	분석	'EU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공동 통신문' 주요 내용 및 분석	임산호
	현안	미국 국방수권법과 경제안보: 투자, 바이오, 조선, 공급망	최용호
26-2호 (2026.1.23)	분석	미국의 베네수엘라 석유산업 개입과 글로벌 에너지 질서 변화	유아름
	현안	한중 정상회담(1.5.) 계기 경제협력 주요 성과	안수린
		한일 정상회담(1.13.) 계기 경제협력 주요 성과	
현안	중국의 對일본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조치 동향 및 시사점	김단비	
26-3호 (2026.2.6)	분석	미국발 AI 경쟁의 새로운 국면: 수출통제와 관세의 결합	이재원
	현안	미국의 기후·에너지 정책 변화와 글로벌 협력 구도 재편	황지현
	현안	중국 반도체 굴기 평가 및 업계 현황	안수린
26-4호 (2026.2.27)	분석	미국 연방대법원 IEEPA 관세 판결 관련 쟁점 분석: 상호관세 위법, 대체 수단, 관세 환급, 무역 질서 영향	최용호
	현안	인도 AI 영향 정상회의(AI Impact Summit) 주요 내용 및 시사점	김수연
	현안	미국-EU 관계 냉각 속 유럽의 역지력 강화 동향	임산호
26-5호 (2026.3.13)	분석	미국 주도의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 동향	황지현
	현안	호르무즈 해협 위기와 글로벌 에너지·경제안보 리스크	유아름
	현안	Made in Europe 규정 (EU 산업가속화법) 발표 및 영향	임산호
26-6호 (2026.3.27)	분석	중국 경제안보 법안 정비 동향 분석 및 시사점	김단비
	분석	양자내성암호(PQC) 전환 동향과 시사점	김수연
	현안	미국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동향	최용호
26-7호 (2026.4.10)	분석	중동 리스크 확대 속 한-주요국 석유제품 중심 공급망 구조 및 리스크 분석	김수연
	현안	에너지 안보 환경의 변화와 한미 원전 협력에 대한 함의	이재원
	현안	중동 사태에 따른 공급망(나프타·브롬·헬륨) 리스크(1)	안수린

발간호 (발간일)	구분	제목	저자명
26-8호 (2026.4.24)	분석	미국 의회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 강화 논의: MATCH 법안 분석	최용호
	현안	중동 사태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2): 요소·무수 암모니아·알루미늄 캐스팅 합금	안수린
	현안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동향 및 시사점	김단비
26-9호 (2026.5.15)	분석	중동전쟁 이후 중국의 에너지안보 전략과 한국에의 함의	임산호
	분석	미국·유럽 전략 기술 투자심사의 공통 과제와 시사점	이재원
	현안	글로벌 권역별 에너지 (원유·천연가스) 의존 및 수급 현황	유아름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Center for Economic Security and Foreign Affairs

온라인 다운로드 ·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게시판

https://www.mofa.go.kr/www/brd/m_26799/list.do

경제안보 Review · 메일링 서비스 신청

cesfa@mofa.go.kr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Center for Economic Security and Foreign Affairs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CESFA, Center for Economic Security and Foreign Affairs)는
공급망, 첨단 기술, 전략 산업 등의 주요 경제안보 현안 대응에 필요한 정책 분석과
국내외 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안보 Review는 격주로 발간되는 경제안보외교센터의 정기 발간물로,
경제안보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정확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전달하여
민관합동의 경제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본지의 내용은 외교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